

19대 국회에 바란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

2012. 3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교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한부모여성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목차

I. 총론	4
II. 2012 총선에 요구하는 20대 핵심과제	11
III. 17개 영역 100대 정책과제	22
(1) 여성 노동	26
(2) 일·생활 균형	41
(3) 젠더 복지 / 돌봄	46
(4) 주거 / 의료 / 교육	59
(5) 여성 건강	69
(6) 여성 폭력	80
(7) 성주류화	105
(8) 여성 대표성	113
(9) 성평등 교육·미디어	122
(10) 통일·평화	132
(11) 이주 여성	139
(12) 여성 장애인	147
(13) 한부모·미혼모 여성	152
(14) 청년 여성	155
(15) 여성 농민	159
(16) 북한이탈여성	166
(17) 성 소수자	170
IV. 19대 국회 입법과제	176
V. 참여단체 및 자문단	197

I. 총론

당신의 삶을 바꾸는 100가지 젠더정책

권미혁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정책생산의 의미와 정책범주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 정책에 중요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오래지 않은 일로서, 시민단체의 공약제안활동과 메니페스토 운동의 영향이 컸다고 보인다. 선거 시기 여성공약이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여성단체의 활동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데¹⁾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1997년 15대 대선 후보의 여성공약 비교를 비롯해 주요 공직선거 때마다 여성정책을 꾸준히 제안해 왔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는 ‘7대 영역 6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정책은 행정부와 국회, 주요 정당 등 여성정책의 입안과 집행담당에게 제안하는 것이면서, 한편 매시기 여성의 삶과 관련된 여성운동의 과제이자 지향점이기도 하다.

2011년 10월부터 2012년 총선에 제안할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성연합 회원단체 및 연대단체들은 총 7번의 워크숍을 가졌다.

여성정책의 범주는 보통 여성발전기본법을 토대로 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과제별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100가지 젠더정책’은 각 단체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을 선별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대상별, 과제별로 그 범주를 나누게 되었다. 전 연령과 계층을 망라하고 있어 다양한 층과 그 층들의 의제를 모두 포괄해야 하는 여성정책의 특성과 운동성과의 반영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한 것이다.

대상별로는 이주여성, 여성장애인, 한부모/미혼모여성, 청년여성, 여성농민, 성소수자, 북한이탈여성 관련 정책이, 주제별로는 여성노동, 일·생활 균형, 젠더복지/돌봄, 주거/의료/교육, 여성건강, 여성폭력, 성주류화, 여성대표성, 성평등 교육·미디어, 통일·평화 등이 들어있다. 비교적 많은 영역을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여

1) 17 , ,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정책영역을 다 포괄하지는 못하였다.

2007년과 비교하면 60개의 과제가 100여개로, 4개 핵심과제가 20개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없던 주거, 건강, 의료, 농민, 청년, 북한 이탈여성 등의 정책이 추가되었다.

○ 후퇴된 여성정책

우선 지난 2007년에 제시했던 정책이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각 영역별로 점검하였다. 1) 현 시점에서 볼 때 2007년에 제기했던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가? 2) 이들 정책은 아직도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각 운동영역에 던진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과제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4대 핵심과제의 하나였던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은 2012년의 <사회 서비스 분야의 괜찮은 여성일자리 2배 확충>이라는 요구에서 보듯 거의 달성되지 못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죄 폐지 역시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 주장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다른 정책들도 비슷하였다.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림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연합에서 요구했던 대부분의 정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실망스럽다.

그렇다면 여성정책이 지난 4년동안 실효성있게 달성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정부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급격하게 후퇴하였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 여성부를 없애려고 했던 것을 신호탄으로 여성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나빠진 탓이다. 그리고 여성정책을 둘러싼 열악한 상황은 정책의 이행과정을 왜곡시켜 정책의도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여성운동도 이같은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여성단체들과의 거버넌스는 심하게 훼손되었다²⁾. 한편, 여성운동에서는 여성의제의 후퇴가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정부의 탓만은 아니라는 반성이 일었다. 사회의 인식과 문화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과 제도가 앞서 갔을 때, 여성정책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와 호감도가 급격히 떨어짐을 경험한 것이다. 2010년 여성연합에서 행한 ‘여성정책 제도화에 대한 평가’ 논의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보장되지 않는 여건에서 민관 거버넌스가 깨지자 여성운동이 어느 순간 정부행정의 대항자 역할에

2) 2010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수입반대를 표명한 광우병 공동대책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프로젝트 지원을 중단하거나 서약서를 요구하였다.

머물게 된 것 아닌가 하는 반성도 있었다. 국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담보할 제도와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의 젠더 거버넌스는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성별분업과 가족주의를 기반으로 여성들을 동원해온 가부장적 발전국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악순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³⁾.

이같은 성찰을 통해 여성운동이 주목한 것은 성평등 가치에 대한 사회적 동의의 중요성이다. 인간중심의 공동체가 되려면 성평등 가치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있을 때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왜 젠더정책인가?

여성운동은 이제까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역사를 바꾸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한 목표로 여성이 받은 차별과 불평등에 주목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성특정적 정책을 통해 여성의 삶이 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분명한 것은 성차별 사회에서 가장 억압되어 있는 존재는 여성이다. 때문에 여성의 자각과 발전을 돕고 여성의 소외와 폭력등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특화적인 정책은 성평등 정책의 기본이다. 따라서 여성의 실태와 경험을 반영하여 여성의 지위를 바꾸기 위한 ‘여성정책’을 통해 우리사회의 성평등은 한층 진전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여성의 처지를 직시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가치로서의 성평등을 위해 여성이 위치한 관계적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보다 총체적인 과제들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즉 ‘여성’의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제기하고 그 관계속에서 해결의 답을 찾음으로서 진정한 변화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여성’이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남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제반 관계 속에서 특정한 위치에 놓여있는 존재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불평등한 사회가 낳은 불평등한 여성과 남성의 삶에 대한 총체적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여성특정적인 여성정책만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역할, 행동 그리고 책임을 규정하는 젠더’정책을 통해 불평등한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성별’로서의 젠더는 그 자체로 불평등한 성별관계의 변화를 함축한다. 궁극적인 성평등의 가치 지향에 여성만의 경험과 주장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우리

3) 신상숙, < - > . , 2011

가 놓인 사회의 상황과 주장을 함께 담아가고자 한다. 여성의 역할의 변화는 반드시 남성의 역할, 그리고 우리사회의 변화와 함께 가야 상호적인 평등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다. 남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 여성만이 변화할 것을 고집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왜곡된 성평등을 결과할 수 있으며, 관계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상호성을 부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문제 해결은 그 안에서 가장 심각하고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행의 길이 될 수 있기에 여기에서 제안하는 100대과제를 ‘젠더정책’으로 이름짓고자 한다.

○ 사회문화적 인식 짚어보기

〈100가지 젠더정책〉에서는 그 정책을 둘러싼 사회인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법,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등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특정 정책에 작용하는지, 그리고 정책을 찬성하는 배경과 반대하는 입장은 각각 어느 지점에 놓여있는지, 특히 반대입장을 설득할 수있는 우리의 논리는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운동현장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다문화가정 혹은 국제결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가족’단위의 정책으로 인식, 폭력피해 여성 개인의 인권 침해문제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사회의 이해가 없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 (아직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젠더정책에 저항적인 흐름을 전환할만한 변화를 수반하는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이 부분의 성과는 정책의 앞 쪽지에 〈사회문화적 인식〉과 일부 정책분야에서 〈정책방향〉이라는 항목 정도로만 반영되었다. 꼭지마다 서술된 맥락이 차이가 나는 것은 단시일 내에 매 정책을 사회문화적으로 완성도있게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석이 어떤 사회적 인식을 극복해야,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성차를 극복하고 균형적인 평등사회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데로 나아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효과를 주었다.

○ 99%가 바라는 것

100가지 정책에는 여성노동 분야와 일·생활 균형, 돌봄, 복지, 주거, 의료정책 등이 연계되어 배치되어 있다. 신사회 위협으로 표현되는 인구구조(저출산·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돌봄의 공백과 신자유주의 양극화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한 여성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정책과 일·생활 균형 정책, 돌봄과 복지정책, 주거정책 등이 통합적으로 사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99%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큰 피해자가 여성이다. 저출산·고령화와 고용 불확실성의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라는 새로운 현실은 남성 가장의 소득활동을 통해서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부장적 모델(舊 젠더질서)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이 담당해 온 돌봄노동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회화되지 못함에 따라 여성은 일과 돌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받고, 이는 경력단절 현상으로 가시화된다. 그리고 남성들은 부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는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을 통한 선택권 확대를 추진해 왔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은 일부 특권층만의 선택권만 보장하게 되었다.

이 같은 정책기조하에 피해해진 국민들은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기를 절실히 원하며 그러한 바램이 여타의 사회정책과 만나 복지국가와 조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노후는 개인이 준비해야 하며, 가족(특히, 자녀)이 부양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 노후 소득보장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여를 해 온 개인들의 시민적 권리로서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바로 이런 면을 나타낸다.

이처럼 100가지 젠더정책은 개인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정부가 정책설계에서부터 ‘공공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 의식과 문화 바꾸기

이번 젠더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각 분야마다 의식과 문화 등 구체적 생활을 바꾸려는 정책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20년 이상 여성운동이 앞장서 만들어온 제도와 현실의 간극이 커지면서, 현 시점에서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는 증거일 것이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반여성폭력** 정책은 그동안 각각의 개별과제

를 단절적으로 나열해오던 전통을 넘어,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 공익광고 캠페인 실시 등의 공동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여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여전히 개인적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낮은 신고율과 유죄 선고율 개선’ 요구는 물론, 성폭력 친고죄 전면 폐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요구 역시 표면적으로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전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외에도 노동분야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의무화, 초중고 교 인권교육 의무화, 농촌지역 성평등 교육 의무화, 인터넷 불쾌광고 규제 등도 전 영역에 걸쳐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의식변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소수자 정책의 강조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을 보며 늘 아쉬웠던 것은 사회에서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는 각종 여성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책에서의 젠더관점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여성정책의 많은 부분은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관련된 모성보호 정책이다. 여성농민 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이 있지만⁴⁾ 실제로는 여전히 여성농업인을 ‘보조적 농업인’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이 제대로 평가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청년여성, 성 소수자, 북한이탈여성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다. 이같은 현상은 한부모, 미혼모 정책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100가지 젠더정책에서는 보통의 사회정책에서 주변화되고 소외되면서도 2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소수자 정책이 많이 담기게 되었다. 이 정책들은 각 부서별로 분절적으로 산재해 있는 소수자 정책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이중의 여성차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기존의 정책제안과도 차별성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다.

4) 강혜정·마상진,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개발연구원, 2007

○ 한계와 과제

성주류화 관련 정책과제는 정부의 정책실무자가 작성한 것처럼 매우 구체적이다.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정책을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위의 정책들은 성주류화 정책과정에 참여한 현장의 절실함이 담겨있다.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상 정책의 성별분석 근거 조항이 마련되고, 이후 성인지예산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면서 성주류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구조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성주류화 정책 담보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보니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맹점이 있다. 그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에서는 점점 더 자세한 정책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경향은 여성정책기구의 위상이 튼튼하지 않은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성주류화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여성정책기구나 추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여성가족부는 매우 취약한 위상이다. 이 취약한 위상으로 인해 정부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제도가 성주류화와 동일시되어 버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런 의미에서 100가지 젠더정책에서는 현재 여성정책기구 등 여성정책추진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지만 빠져 있다. 여성연합에서는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에 맞추어 여성정책추진체계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여성연합 회원단체들과 연대단체들은 워십 등 젠더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성평등 정책을 힘있게 구현해나갈 환경을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신사회 위협,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변화라는 사회변화도 직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운동영역의 고심을 ‘100가지 젠더정책’에 담으려고 했지만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공동체의 기본가치는 성평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이 정책담당자의 의지와 국민들의 호응, 시민운동의 역동성을 토대로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2012 총선에 요구하는 20대 핵심과제⁵⁾

1.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2배 확충 및 공공성 강화
2. 공공부문부터 여성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4.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을 허용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
5. 여성폭력근절 및 피해자지원 체계 전면 개편
6.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 도입
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8.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9.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체 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
10.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 설치
11. 초·중·고교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12. 평화·통일·외교·안보 분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13. 기초노령연금 2배로 확충
14.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도입 및 추가부담금 건강보험 지원
15. 이주민 체류권 확보를 위해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폐지
16.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17.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18. 청년여성의 안전한 주거 확보를 위한 여성공동임대주택 보급
1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농가경영협약 정부 인센티브제도 도입
20.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5) 각 정책에 대한 세부 현황 및 정책과제는 본문 참조

과제 01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2배 확충 및 공공성 강화

1) 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비중은 OECD 평균 21.7%의 절반수준인 12.6%, 가족구조의 변화로 그동안 여성이 담당해 온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증가시킨 여성일자리는 연간 평균 66,000건에 불과.
-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전달체계를 민간 시장에 맡겨 대부분 임시직이거나 단기 일자리로 고용과 소득보장이 되지 못해 나쁜 일자리 양산.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됨으로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

2) 정책과제

- 정부가 사회서비스 돌봄분야(보육, 방과후, 간병, 노인요양, 산모관리 등)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지속적인 고용유지, 적절한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80%)보장, 가사사용인의 노동자성 인정

과제 02 공공부문부터 여성비정규직의 100%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 직접고용 전환

1) 필요성

-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이 OECD국가 중 4번째로 높고 여성비정규직 비율이 61.8%(2011.8)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음. 남성 정규직과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매우 심하며(100:40.5),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간접고용 여성노동자는 27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용역회사나 파견회사의 교체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함. 불안정 취업자 중에서도 용역회사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인 130만원보다 낮은 117만원에 불과함.

2) 정책과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전환, 여성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
- 간접고용, 공공부문은 직접고용하고 민간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

과제 03 국공립어린이집 30%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1)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5.3%, 전체 이용아동의 10.7%.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16만8,153명으로 정원보다 많은 상황임.
-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 선호가 높고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음.

2) 정책과제

- 2017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어린이집 수의 30%로 확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과제 04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

1) 필요성

- 낙태율 세계 1위. 모자보건법에 따른 합법적 시술 4.4% 뿐. ‘안전하지 못한 낙태’는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향후 출산의 질(quality) 저해.
-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임신중절 허용, 허용범위가 가장 큰 ‘여성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도 유럽 국가 중 70%에서 시행.

2) 정책과제

- 사회경제적 사유⁶⁾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모자보건법 개정)

6) 출생에 따른 임부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핀란드 : 출산이나 육아가 산모나 그녀의 가족의 생활조건, 그리고 여타 상황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 산모가 17세 이하이거나 40세 이상인 경우, 이미 4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 헝가리 : 임부가 미혼이거나 지속적인 별거생활 중이거나 35세 이상이거나 임부와 그 남편이 자기 소유의 집이나 독립적인 셋집을 가지지 못한 경우로 규정.

과제 05 여성폭력근절 및 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1) 필요성

- 정부는 여성폭력피해자지원시설에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며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의 가장 기본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허물고 있음.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정책이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의 일반 회계가 아닌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으로 편성되어있어 불안정한 상황임.
-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 피해자 지원,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통합적 여성폭력근절대책 필요.

2) 정책과제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한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산망 사용 중지
-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 및 관련 부처 단일화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을 여성가족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
- 통합적 여성폭력근절대책 마련 및 집행 체계 마련

과제 06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우선제 도입

1) 필요성

- 2010년 현재 부부폭력률 53.8%, 신체적 폭력 발생률 16.7%.
-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 뿐인데, 그마저도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전반적으로 ‘가해자 처벌’은 매우 느슨함. 임시조치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불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현장에서의 체포 등 강력한 사법적 개입이 재범억제에 가장 효과적임.

2) 정책과제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 체포 우선제도 도입

과제 07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1) 필요성

-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은 폐지됐으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존치하고 있음.
- 친고죄는 성폭력을 피해자의 개인적 치부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사회적 편견을 확산시킴. 그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경우 신고율(12.3%), 기소율(16.9%)이 낮고 가해자 측으로부터 과도하게 합의를 중용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됨.

2) 정책과제

- 친고죄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
- 고소율, ‘공소권 없음’ 처분, 불기소 사유에 대한 경·검찰 통계 공개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전면 폐지

과제 08 성매매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및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1) 필요성

- 현재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분기준이 애매하고 일관성이 부재하며 처벌을 받고도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심지어 경찰·검찰은 여성단체에서 법률지원을 하며 선불금을 벌미로 성매매강요가 이루어지는 정황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강요의 내용이 분명치 않다면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음.

2) 정책과제

-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불법수익 몰수, 추징 등 강력한 처벌 시행
-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단속, 적발, 업소폐쇄 및 건물주에 대한 처벌 등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규제 강화
- 성매매여성의 피해자 인정과 인권보호 강화

과제 09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체 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

1) 필요성

- 현행 선거제도는 득표와 의석간의 불비례성이 크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보완조치로써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전체 의석수의 18% 수준으로 현저히 낮음.
- 현행 선거제도가 갖는 대표성 왜곡문제를 해결하여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함.

2) 정책과제

-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체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

과제 10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 설치

1) 필요성

- 현재 성주류화 관련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모두 그 실효성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그 이유는 성주류화 정책 전담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있음. 정부의 모든 부처에 걸쳐 성주류화 정책을 추동하고 강력히 견인해낼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정책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함.

2) 정책과제

- 정부, 전문가, NGO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 설치
- 여성가족부에 대한 성주류화 정책 통합적 추진 주무부처로서 위상 정립
- 성주류화의 실효성을 위해 NGO와의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과제 11 초·중·고교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1) 필요성

- 성별, 학별,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다문화·다인종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일반인 92%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5.3%에 불과함. 초·중·고 각급 학교, 법무경찰 등 공공분야의 인권교육은 양적 성장을 했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인권교육 기반 구축은 미흡함.

2) 정책과제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 인권교육의 정체성, 인권교육의 권리와 의무 규정, 인권교육 추진기구 설립, 인권교육 실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지원시스템 등 구축

과제 12 평화·통일·외교·안보 분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1) 필요성

-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의 성인지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 지극히 적은 규모임. 국방·통일·외교 분야 고위공무원단은 국방부 0%, 통일부 4.8%에 불과함.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도 이뤄졌던 여성들간의 교류가 현 정부 들어 완전히 차단됨.
- 평화·안보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 통합, 여성의 참여 보장, 성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를 촉구한 평화·안보·여성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시급함.

2) 정책과제

- 평화·통일·외교·안보 분야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과제 13 기초노령연금 2배로 확충

1) 필요성

- 한국노인의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3%의 3.4배,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6.6%로 스웨덴의 6배, 미국의 2배임.
- 노인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1인 최저생계비의 17% 수준으로 수급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매우 낮은 금액임.

2) 정책과제

- 기초노령연금을 2배로 인상, 부부가구 감액 폐지
- 장기 과제 : 쉰 노인인구로 수혜대상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기초 연금제 도입

과제 14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금 상한선 도입

1) 필요성

-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로 OECD 평균 85%보다 낮아서 의료비 본인 부담이 높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해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의료비 지출로 가계 파탄의 원인이 됨.
- 국민건강보험은 노인인구 증가와 의료 상업화 경향에 따른 비급여 서비스 개발로 보장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국민의료비 증가속도에 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증가 속도가 느려 국민이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음.

2) 정책과제

-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등 건강보험 수입구조 개혁
- 행위별 수가제 폐기 및 총액예산제 도입,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급여제도 확대, 본인의 의료부담금을 연간 최대 100만원으로 정하는 상한선제 도입

과제 15

결혼이주민 체류권 확보를 위한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 요구제 폐지

1) 필요성

- 결혼이주민의 체류권을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들은 자신의 체류 문제가 한국인 배우자의 ‘마음먹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현실임.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 보증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부 관계에서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음.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은 법적 결혼이 이루어지면 외국인 배우자는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혼인관계가 해소되도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함.

2) 정책과제

-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체류자격 자동 연장
-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연장, 영주권 및 귀화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폐지,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체류권 취득하도록 제도 개선
-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조치 마련

과제 16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1) 필요성

-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수준, 취업률,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음. 즉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기회가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 여성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지원제도 필요.

2) 정책과제

- 여성장애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및 가사지원, 여성장애인 고용 및 평생교육 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전문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행정부처 내 여성장애인 지원 추진 전담체계 설치

과제 17

한부모 · 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1) 필요성

-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혼·미혼 한부모 가족이 전 배우자 혹은 자녀의 생부로부터 자녀부양비를 받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으나, 비동거 부모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음.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비동거 부모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공식적인 아동양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음.

2) 정책과제

- 자녀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비동거 부모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과제 18

청년여성의 안전한 주거 확보를 위한 여성공동임대주택 보급

1) 필요성

-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학업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 등의 개인부채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에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음.
- 특히 청년여성의 경우 안정적 주거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젊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지역에서 연쇄 성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거지역에서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2) 정책과제

- 청년여성을 위한 안전한 공용 임대주택 <여성 세이프 셰어 하우스(Safe Share Housing)> 보급
- ‘주거연대계약 제도’ 도입
-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보안시스템 마련

과제 19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농가경영협약 정부 인센티브제도 도입

1) 필요성

- 농민 중에 경영주가 남편인 비율이 70.3%이고, 여성농민 본인이 경영주인 경우는 26.3%에 불과함. 농업정책, 지자체, 마을, 법인 등 모든 영역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인으로서의 지위에 합당한 보편적 복지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주로서의 지위 확보가 기본 조건임.

2) 정책과제

-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보장 및 지위 확보 방안 마련
 - 배우자 공동경영인 등록 농가에 대한 연금 특례
 - 농가경영협약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인센티브) 제도 등

과제 20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1) 필요성

-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함.

2) 정책과제

-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Ⅲ. 17개 영역 100대 정책과제

[1] 여성 노동	26
1-1.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26
1.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2배 확대	27
2.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보장 및 공공성 강화	28
3. 비공식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29
1-2. 여성 비정규직	30
1. 공공부문부터 여성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	31
2. 간접고용, 특수고용, 시간제 노동에 대한 차별 개선	33
3. 여성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확대	35
1-3. 성차별 없는 고용평등	36
1.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	37
2.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	38
3. 직장 내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시행	39
[2] 일 · 생활 균형	41
1. 부모휴가(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 확대	42
2.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보장	43
3. 근로시간 규제를 통한 실질근로시간 단축	44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취업 부모의 욕구에 맞춘 보육서비스 지원	45
[3] 젠더 복지 / 돌봄	46
3-1. 아동돌봄	46
1.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로 확대	46
2. 특별활동비 규제로 실질적인 무상보육 실현	48
3.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및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49
4.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책임 외면하는 ‘양육수당’ 철회	50
5.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중단 및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폐기	51
6.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52
3-2. 노인돌봄	53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성 확대	53
2.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55
3.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	56

3-3. 노후 소득보장	57
1.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57
2.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의 국민연금 개별 수급권 확보 방안 마련	58
[4] 주거 / 의료 / 교육	59
4-1. 주거	59
1. 주거양극화,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	59
2.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재정립	61
3. 여성의 안심주거 보장하는 주거정책 필요	62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료 차등제도 도입	64
4-2. 의료	65
1.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선제 도입	65
4-3. 교육	67
1. 반값등록금 실현	67
2.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및 고교의무교육 시행	68
[5] 여성 건강	69
1.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낙태) 허용	69
2. 여성의 재생산 건강 보장	71
3.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73
4. 신체왜곡 : 미용성형 및 다이어트와 여성건강	75
5. 여성건강권 인프라 구축	77
6. 의료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	79
[6] 여성 폭력	80
6-1. 여성폭력분야 공통과제	80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80
2.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 실시	82
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83
4.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안정화	84
5.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낮은 신고율과 유죄 선고율 개선	85
6-2. 성폭력	86
1. 친고죄 전면 폐지	86
2. 수사·재판 과정의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87
3. 형법 개정: 성폭력특별법의 처벌조항을 형법으로 일원화	88
4.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90
6-3. 가정 폭력	91
1.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91

2. 가정폭력범죄 신고율 제고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92
3.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	94
6-4. 성매매	95
1.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95
2.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인정과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97
3. 성매수, 접대/상납 행위 공무원 및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99
4.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101
5. 10대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통합지원 확대	103
[7] 성주류화	105
1. 성주류화 추진체계 및 젠더거버넌스 구축	105
2.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시민참여형으로 전환	107
3. 성인지예산 실효성 강화	109
4.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성주류화 정책 교육 강화	111
5. 성별분리통계 강화	112
[8] 여성 대표성	113
8-1. 정치분야 대표성	113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체 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	113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114
3.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116
4.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국회법 등 개정	118
8-2. 공공분야 대표성	119
1. 공공기관 · 공기업 등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119
8-3. 사법분야 대표성	121
1. 대법관 · 헌법재판관 여성 비율 40% 달성	121
[9] 성평등 교육 · 미디어	122
9-1. 성평등 교육	122
1. 초·중·고교에 인권교육 의무화	122
2. 성차별적 교과서 내용 수정	123
3. 여학생과 남학생의 동등한 교육적 성취 지원	125
4. 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및 성희롱 금지 학교규칙 제정	127
9-2. 정보/미디어	128
1. 인터넷 불쾌광고 제한	128
2. 여성연예인 인권 보장	130
[10] 통일 · 평화	132

1. 화해협력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 추진	132
2.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134
3. 한미동맹 편향 외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확대	136
4.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여성참여 확대	137
[11] 이주 여성	139
1.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	140
2.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142
3.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감독, 처벌권·배상권 확대를 통한 국제결혼 피해 구제 강구	144
4. 미등록 또는 중도입국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	146
[12] 여성 장애인	147
1.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147
2.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149
3. 여성장애인 지표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	151
[13] 한부모 · 미혼모 여성	152
1. 한부모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한부모가족지원정책 추진	152
2.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154
[14] 청년 여성	155
1. 청년 여성의 안전한 주거권 확보	155
2. 청년여성 고용할당 의무제 실시	157
3. 청년구직자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도입	158
[15] 여성 농민	159
1.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160
2. 여성농민의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	162
3. 농촌 지역의 성평등 실현	164
[16] 북한이탈여성	166
1.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보호와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적극적 지원	167
[17] 성 소수자	170
1. 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인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	172
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인식 개선	173
3. 가족구성권 보장 및 여성 성소수자의 인권 실태조사 실시	175

여성 노동

1-1.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사회문화적 인식〉

- 최근 각 정당은 일자리 대책, 민생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양적 일자리 확대에 집중함에 따라 단기, 임시 일자리에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정책은 그동안 여성이 개별적으로 수행해 온 돌봄노동을 사회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지만 전통적으로 여성이 ‘헌신’과 ‘사랑’으로 수행하는 역할이었기에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서 질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은 사적영역 뿐만 아니라 공적영역의 돌봄서비스 분야 일자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 방향〉

- 정부는 적극적으로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여성일job을 창출한다.
- 가족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누구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한다.

1.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2배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로 남성의 73.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이며, OECD국가의 평균 64%에 비해서도 현저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년째 50%대 전후로 정체되는 것은 여성의 일자리가 고용 불안정, 저임금 등 나쁜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고, 임신·출산기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게 되는 M자 고용유형 변화를 위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은 그동안 개별 가정과 여성들이 주로 전담했던 무급 돌봄노동을 유급노동으로 전환하여 돌봄노동을 사회화함으로써 고용 활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긍정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대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서비스 중심의 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정책이다. 여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중공업, 건설, 토목사업들에 비해 여성 일자리 확대 영역으로 유효하다.
-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 비중은 12.6%로 덴마크 31.3%, 영국 26.9%, 독일 25.0%, 일본 16.0%보다도 낮고, OECD 평균인 21.7%에 비해 서도 낮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여성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사회서비스 영역의 여성 일자리를 OECD 평균수준으로 확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중 돌봄서비스 분야(장애, 보육, 노인돌봄, 산모관리 등)의 일자리를 현재의 약 2배인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
 - 모든 국민이 돌봄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적인프라를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2.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보장 및 공공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정부가 확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불안정 고용 상태의 여성일자리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을 재생산하고 있다. 특히 돌봄서비스 영역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무급으로 수행해 왔던 영역으로 인식되어 노동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다. 따라서 돌봄서비스 일자리는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적서비스가 되고, 노동자 임금과 노동안정성이 보장되는 괜찮은(decent)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지원과 집중적 투자를 해야 한다.
- 현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가 재원만 조달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을 민간 시장에 맡기고 있어 공공성이 온전하게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처별, 사업별, 대상별로 분리되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민간 시장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위법, 탈법행위를 돌봄서비스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근로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2) 정책과제

- 정부 차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고용보장 및 근로조건 향상
 -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고용유지 방안 마련
 - 노동자 평균임금(월 283만원)의 80% 수준으로 적정한 임금 보장
 -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인권(성희롱 예방, 인격적 대우)보장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공공화하기 위한 공적관리 방안 마련

3. 비공식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간병, 육아, 가사도우미 영역의 비공식 노동자는 약 30여만 명에 달하고 있지만,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으로 인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최근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가 실시한 임금실태조사에 따르면, 비공식 가사노동자의 50% 이상이 90만원 미만의 월수입을 받으면서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며, 2011년에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국제협약으로 채택한 ‘가사노동자의 법적보호를 위한 협약’에 대한 국내 비준이 절실하다.

2) 정책과제

- 비공식 분야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 가사 노동자 보호 ILO 협약 조속히 비준
 - 근로기준법 개정 :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에서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을 삭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법 개정 : 특례조항으로 사회보험 가입 대상으로 명시

1-2. 여성 비정규직

〈사회문화적 인식〉

- 여성 노동이 존중받고 지속가능한 노동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범인 여성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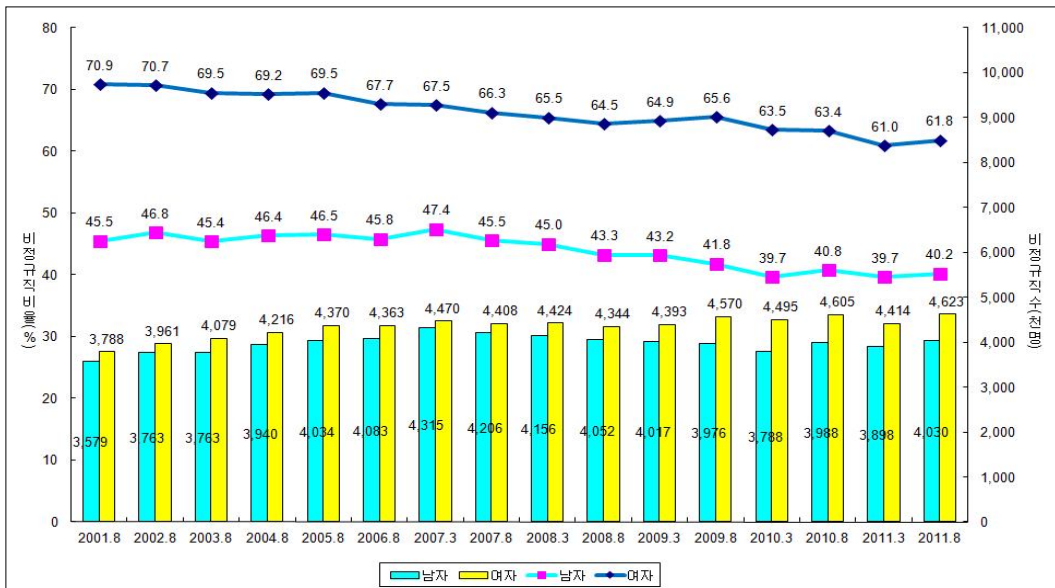
- 여성노동이 존중되고 지속가능한 노동이 되도록 해야 한다.
- 공공부문에서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민간 부문 비정규직의 반복 상시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하도록 견인해야 한다.

1. 공공부문부터 여성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화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11년 8월 현재 여성 비정규직 비율은 61.8%로 남성 비정규직 비율 40.2%에 비해 서도 월등히 높다. 남녀 비정규직 수를 비교해도 여성비정규직은 남성 비정규직보다 59만 명(21.6%p)이 더 많은 실정이다.

〈 2001~2011 성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⁷⁾ 〉



- 또한 여성 비정규직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히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를 살펴보면, 남성 정규직 임금 대비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 임금의 절반보다 낮은 40.5%에 불과하다.⁸⁾
- 이처럼 여성 비정규직이 확대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축소를 견인해야 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도리어 증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업 비정규직

7) 출처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11

8) 출처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2011

의 경우 현 정부에서 그 수치가 급증했다. 집권 초기인 2008년 3월과 2011년 8월을 비교해 보면 공공행정의 경우 22.2%에서 30.1%로 늘어났으며, 보건사회복지사업은 35.3%에서 45.1%로, 교육서비스는 46.8%에서 48.9%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 최근 공기업 및 민간 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선호함에 따라 그 비율도 높아지고 있으며 간접고용 노동자 61만 명 중 여성노동자는 약 27만 명에 달하고 있다.

2) 정책과제

- 공공부문부터 여성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전환
-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 전체 여성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실시 : 민간 비정규직 사용사유 규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원금 확보, 공공영역의 신규 인력은 정규직으로 채용

2. 간접고용, 특수고용, 시간제 노동에 대한 차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간접고용 노동자는 용역회사나 파견회사의 교체로 인해 고용이 불안정하며 최저임찰제로 인해 더 열악한 임금 및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특히 대기업의 사내하청 남용이 심각하여 300인 이상 사업체 중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업체는 54.6%에 달한다.(2008년 기준) 또한 전통적인 제조업 뿐 아니라 300인 이상 병원의 경우 82%가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등 생명을 다루는 간호, 간병,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도 사내하청이 급증하고 있다.
- 한국의 시간제 노동자는 OECD 전체에 비해 그 비중은 낮으나 비자발성이 높고 비정규직 비중이 높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시간제노동자 비중은 여성(2002년 10%→2010년 16.4%)과 남성(2.7%→4.4%) 모두 증가했으나 여성의 비율과 증가세가 남성보다 높고, 여성 시간제 노동자 중 98%가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에 놓여있다.
- 여전히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규모는 전국 60만여 명에 이르며, 이중 여성노동자가 68%를 차지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조합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의견표출이 어렵고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재능교육, 88cc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해고된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산업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제외 업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산재 적용이 허용된 4개 업종조차도 그 비용을 사용자와 공동부담(5:5)하게 되어 있어 가입율이 2%대에 머물러 있다.

2) 정책과제

-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차별 해소
 - 민간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산업재해, 고용보장 등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 용역 중간착취 금지, 입찰제도 개선(최저낙찰제 규제) 등 저임금 해소방안 마련

- 특수고용(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차별 개선
 - 산재보험법 개정 : 근로자 개념 확대(5조 2항), 산재보험 전면 적용, 보험료 사업주 100% 부담, 적용제외 신청 조항(125조 4항) 삭제 등
- 시간제 노동자 확대 정책 중단
 - 시간제 노동자 정규직화 : 공공부문 시간제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
 -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모두 적용 :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적용
- 대부분이 여성인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 호봉제, 차별 없는 토요 유급화,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육감 직접고용 등 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학교비정규직 관련법 제정

3. 여성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 확대

1) 현황 및 과제

- 2011년 8월 사회보험 적용율을 살펴보면 그 중에서도 여성 비정규직이 가장 낮다. 여성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국민연금 32%, 건강보험 34%, 고용보험 34%에 불과하여 여성 비정규직의 2/3는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 OECD는 “한국의 조세와 사회보장 혜택은 회원국 중 가장 비효과적”이라며 “부족한 소득을 보전할 만큼 충분히 규모가 크지도 않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의 빈곤 문제를 완화할 만큼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 2011)하고 있다.

2) 정책과제

○ 저소득층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은 전사업장 노동자 중 최저임금 130% 이하로 확대

○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 특수고용노동자, 호출노동자, 가내근로노동자, 단기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1-3. 성차별 없는 고용평등

〈사회문화적 인식〉

- 사회적으로 여성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직장내 여성노동자 차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지고 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남녀가 하는 일이 달라서 임금체계도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 대학교 입학률이 남녀 모두 80%를 넘었으나, 노동시장에 진출하면 여성은 남성의 62%에 해당하는 임금밖에 받지 못한다. 이는 여성이라는 이유가 노동시장에서 차별요인이 되는 것으로 정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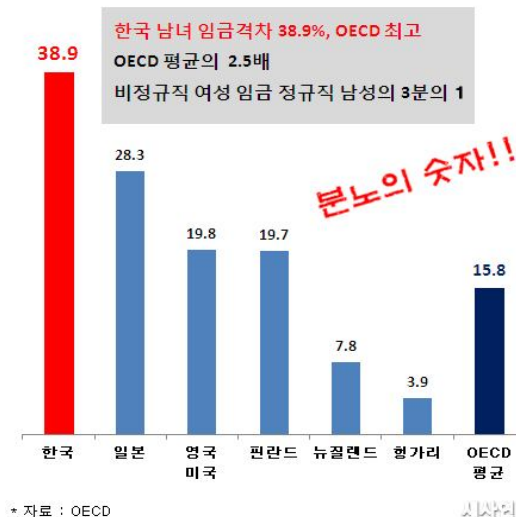
〈정책 방향〉

- 성별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
- 승진 차별을 없애고 대기업 여성채용을 늘려 여성임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
- 성 차별적 직장문화 개선 및 직장내 성희롱 0(제로) 만들기

1.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2009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8.9 (남성 100, 여성 61.1)
- 2009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OECD 평균 15.8%의 2.5배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가장 작은 나라는 3.9%인 헝가리로 한국과 무려 10배 차이가 난다.
- 2011년에 열린 제49차 유엔여성차별위원회(CEDAW)는 최종 견해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관련된 조항의 집행’을 권고했다.



한국사회 분노의 숫자(4) : 남녀 임금격차 국제 비교

〈* 출처 : 2012 / 02 / 06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 정책과제

○ 성별 임금격차 완화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
- 공공부문부터 직무평가·직무분석을 통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기준 마련

2.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

1) 현황 및 문제점

○ 최저임금법 개정

- 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P9010,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도 가장 심하다.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4,11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196만명으로 비정규직은 185만명(94.3%)이고 여성이 61.5%를 차지하고 있다. (2010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통계청)
-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는 ‘생산성증가율+물가상승률’(10.0%)은 물론이고 평균임금 인상률(4.0%)이나 소비자물가상승률(2.9%)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2) 정책과제

○ 최저임금 기준 조정 :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

-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기준 조정,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및 벌칙 수준 강화

3. 직장 내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 시행

1) 현황 및 문제점

- 고위직여성은 극소수, 실효성 낮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 우리나라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중양은 7.4%, 지방은 4.9%에 불과(2010년 말) 하며 우리나라 10대 대기업그룹의 임원 비율은 1.3%이며 여성임원이 없는 곳도 4곳이나 된다. (한겨레신문, 2011)
 - 노르웨이 공기업의 경우 종업원 규모에 상관없이 여성 40% 임원 할당제 시행하여 ‘유리천장’을 깨뜨렸으며, 프랑스 의회는 기업 임원의 40%를 여성으로 정하는 여성할당제를 법안으로 통과시켰고,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은 40% 여성할당제를 시행했거나 비슷한 법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 한국의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사업장의 연도별 여성고용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그 증가폭이 1-2%에 불과하며, 관리직 비율도 2% 내외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도리어 여성관리자 비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 내 성희롱
 - 2009년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한 돌봄노동자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34.8%가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성희롱 피해 후 32.3%는 그냥 참는다고 응답하여 성희롱으로 인한 인권 침해가 심각함을 드러냈다. 대응하지 않고 참는 이유는 ‘아픈 사람이니까’, ‘돌봄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응답하여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를 구제할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2011년 한국여성노동자회에 접수된 256건의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분석한 결과 내담자 중 재직자 비중이 58.3%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근로조건 상담의 경우 재직자 비율이 62.1%였으며, 모성권 상담은 96.4%로 나타났다.
 - 현행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 의무 또는 피해자가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독일은 1994년 9월 입법을 통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피해 노동자가 사업장 내 담당기관에 대해 고충을 호소할 수 있는 권리, 일정한 요건에 따른 노동자의 작업거부권 등 피해노동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정책과제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조치) 개선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확대 및 벌칙조항 마련, 이행계획서 실행에 따른 인센티브 조치를 강화
- 조사항목에 정규직/비정규직 여부 확인 문항 및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남성 육아휴직 사용유무 등의 현황조사 삽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사업장의 개선 결과 공표 의무화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내 성희롱 작업거부권 법제화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여성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100% 유급으로 법제화
- 돌봄노동자 성희롱 예방 및 고객에 의한 성희롱 법제화

○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 초, 중등, 대학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 실시 의무화

일 · 생활 균형

〈정책 방향〉

-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가족의 생계를, 여성은 가정에서 아동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여전하다. 인간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돌봄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으며 생존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과도한 책임감으로 일만 하면서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상실하고 있으며, 여성은 보조생계부양자로서 일과 돌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 그러나 여성고용의 증가, 맞벌이 가족이 보편화 되면서 남녀노동자가 함께 노동을 지속하고 자녀양육을 평등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지지하는 것이 바로 일·생활 균형정책으로 부모휴가정책, 노동시간정책, 보육정책이 통합적으로 구축될 때 그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다.
- 출산휴가 및 남녀의 육아휴직 사용은 당연한 권리가 되어야 하며, 아동이 성장하는 시기에 필요한 적절한 보육서비스, 방과후 보육, 방과후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의 노동시간을 감축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

1. 부모휴가(출산 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현재 한국의 25-29세 여성 고용률은 6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으며, 같은 연령대의 OECD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30-34세 한국 여성의 고용률은 50.1%로 급격하게 감소한 후 45-49세 64.2%로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는 전형적인 M자형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성노동자의 경력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부의 일·생활균형 정책이 미흡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여성 임금노동자 1,000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20.1%가 출산휴가 급여를 수령했으나, 육아휴직제도 활용도는 10%대였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10명 중 1~2명만이 모성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전후 휴가제도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44.6%인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8.6%에 불과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무 여성노동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59%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이 모른다고 답했다(연합뉴스, 2011.12).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유급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휴가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경우 20대는 48.6%, 30대는 54.9%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며, 여성의 고용보험 미가입율은 20대는 47.9%, 30대는 62.8%에 달한다.

2) 정책과제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 보장
-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휴가 시부터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
- 비정규직 여성의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월 40만원-60만원을 2배로 인상
- 기업의 각종 보고 및 평가자료에 휴가제도의 남녀 사용율을 포함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2.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출산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에 불과하다.
- 스웨덴은 육아휴직 16개월 중 2개월씩은 부모가 각각 의무적 사용해야 하며, 독일은 14개월 중 2개월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은 다른 부모가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으나,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의 급여 대비 낮은 육아휴직 급여, 남성의 돌봄참여를 무시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으로 인해 실제 휴가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정책과제

- 아버지 영아 육아휴가제도 도입 (만1세 될 때까지 30일 육아휴가 부여)
- 육아휴직 소득 대체율 인상

〈부모휴가 현황〉

구분		여성	남성	비고
출산전후 휴가		15주(90일), 최고 135만원 한도	3일, 유급	대규모 기업은 30일간 135만원 한도 내 지원
육아휴직	기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당 각 52주(12개월)	여성과 동일	한 자녀를 기준으로 남녀 각각 1년 사용 가능
	급여수준	육아휴직기간 동안 최저 50만원 ~ 월 급여의 40%	여성과 동일	

3. 근로시간 규제를 통한 실질근로시간 단축

1) 현황 및 문제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인 2,193시간(2010년 기준)으로 OECD 평균(1749시간)보다 444시간이나 많다.
- 평균 근로시간을 OECD 평균수준(1749시간)으로 줄일 경우 적어도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는 통계청 1월 공식실업자 85만명이 모두 취업하고도 남는 규모다(내일신문, 2011.2.17).
- 2010년 8월 노사정위원회는 202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노동계는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경영계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다.

2) 정책과제

- 임금저하 없고 인력확충을 통한 실질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휴일, 야간 근로 제한 및 초과근로시간 규제(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초과근로시간 규제)
- 법적 노동시간 준수 : 대형마트, 유통업 심야 근무 제한 및 초과근무를 지양하는 기업문화 구축 및 임금구조 개선
- 장기적으로 현행 주 40시간인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과도한 회식문화 줄이기, Family day 실시로 생활시간의 변화 유도, 국내 기업에 일·생활 균형정책 적극 홍보

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취업 부모의 욕구에 맞춘 보육서비스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한 연구에 따르면⁹⁾, 한국 근로자들은 친인척 양육(27.6%), 보육시설(21.2%), 유치원(20.3%)의 순서로 자녀양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탓이다. 또한 부모의 다양한 취업형태에 따른 일시보육, 야간보육, 영아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우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아어린이집이 부족하며,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상시 여성 노동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일 경우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육시설 설치는 31.1%, 보육수당 지급 21.9% 등으로 의무이행율은 59%(2010년 12월 기준)에 불과하지만, 미이행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부모들이 가장 믿고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역시 전체 어린이집 중 5.3%에 불과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왜곡된 민간중심의 보육현장을 견제할 수 있으므로 일정 정도 확대되어야 한다.

2) 정책과제

- 취업부모의 욕구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아보육, 일시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서비스 원활하게 제공
- 육아휴직 종료이후 이용 가능한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17년까지 최소한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 직장어린이집 확대 및 직장 보육과 지역보육 연계

9) 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 복지 / 돌봄

3-1. 아동돌봄

1.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로 확대

1) 사회문화적 인식

- 대부분의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지만, 과도한 국가 재정 투입에 대한 걱정과 대다수 아동들이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므로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보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전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왜곡된 민간중심의 보육현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30%는 되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5.3%에 불과하며,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10.7%만이 이용하고 있다.
- 2011년 6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16만8,153명으로 정원(15만 5,132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내 632개 국공립 어린이집의 누적 대기자가 총 16만728명으로 정원의 세배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3) 정책과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17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이 되도록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및 역할

- 부모들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하므로, 근거리에 소규모 시설 위주로 확충
- 개인시설 매입, 초등학교 유허공간 활용, 공동주택 의무설치, 공공시설 활용 등을 통해 확충
- 민간 보육시설이 운영상의 이유로 회피하는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야간보육 등)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 거점보육 역할 :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육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전달체계로서 정부가 추구하는 표준보육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내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견인하며, 다양한 보육정책(가정보육, 시간제 보육, 보육정보센터 등)의 역할을 수행

2. 특별활동비 규제로 실질적인 무상보육 실현

1) 사회문화적 인식

-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이므로 무상보육을 통해 양육을 지원하면 저출산 현상은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 그러나 정부는 재정지원만 할 뿐, 보육서비스 질 개선정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타비용(특별활동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올해부터 0-2세아와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아동 1인당 0세아는 394,000원, 1세아는 347,000원, 2세아는 286,000원, 5세아는 200,000원을 부모에게 지원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영아(0-2세아)에게는 아동 1인당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1인당 0세는 73만원, 1세는 49만원, 2세는 40만원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 이처럼 정부는 부모가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무상보육’확대를 홍보하고 있지만, 부모는 어린이집에 월 8-24만원까지 특별활동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무상보육을 체험하기 어렵다. 이러한 비용은 지자체 보육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운영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어 부모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정책과제

- 꼭 필요한 특별활동 과목은 표준보육교육 과정에 반영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 그 외 특별활동 과목과 비용 최소화

3.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및 보육교사 노동조건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1)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부터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가 지원되고 평가인증제가 시행되었다. 제도 설계 단계부터 시민사회단체는 평가인증제도와 정부 재정지원 연계를 요구했으나, 민간어린이집 등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후 다양한 형태의 재정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와 아동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데, 보육교사의 처우 및 근로조건은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어린이집 설치 유형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 1일 12시간인 어린이집 운영시간 중 보육교사 1인은 평일 평균 9시간 30분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장시간, 저임금 노동, 과중한 업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미지급, 노동강도 강화와 건강악화 등으로 잦은 이직과 직종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이 여성인 전국 16만 7천여명의 보육교사 중 16%만이 국공립 또는 법인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으며, 국공립의 월평균 급여는 125만 8천원, 민간의 월평균 급여는 119만원으로 조사되었다(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 정책과제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 참여 의무화 및 퇴출 방안 마련
- 보육교사의 8시간 근무 정착을 위한 제도 시행(교대제 도입 등)
- 보육교사 인력관리 및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공적 서비스 공급구조 모색

4.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책임 외면하는 ‘양육수당’ 철회

1) 사회문화적 인식

-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이므로 이를 보장한다는 논리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은 현금수입이 발생하므로 정책체감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가족, 특히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다. 육아와 가사를 이유로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763만여명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이다.(2011.1월 기준). 일과 가족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적합한 일자리가 있다면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 외국의 가정양육수당은 여성이 퇴직 후 집에서 아동양육을 하거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 책임이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즉 주위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원하면서 특정한 정책목적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에서 아이 돌보면서 수당 받으라는 것은 정부가 ‘돈’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 양육수당은 여성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보육정책의 목적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양육수당은 철회되어야 한다.

3) 정책과제

- 양육수당 철회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

5.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중단 및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폐기

1) 사회문화적 인식

- 정부는 부모 욕구에 맞춰 다양하고 특성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자율형 어린이집’을 추진하고자 했으며,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대신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모들은 보육양극화를 부추기는 자율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있으나, 국공립어린이집이 빠르게 확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정부재정이 더 투입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호하게 된다.
- 그러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설로,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의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인 새싹플랜은 5년 동안 당시의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2배로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신축예산을 매년 10개소 정도만 편성해 왔다.
- 반면,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민간 개인어린이집 중 보육료 수납액의 1.5배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정할 수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보육격차를 심화시켜 이후에도 누적적 교육 격차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의 반대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워지자, 일정 수준이상의 평가인증점수를 받은 민간어린이집에 중앙정부가 재정을 더 지원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 현재 시범사업 중이다. 그러나, 개인이 소유권과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은 정부 재정지원은 요구하면서 엄격한 기준과 관리방안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감독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3) 정책과제

-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완전 폐기,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중단 및 모니터링 등 관리 감독 강화

6. 초등 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1) 사회문화적 인식

- 아동 돌봄의 1차 책임은 여성의 역할이므로 방과후 돌봄 역시 가족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존재하며, 아동돌봄이 필요한 부모는 초등 돌봄교실 이용 아동이 주로 저소득층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용을 꺼려한다.
- 그러나 방과후 보육·교육 역시 보육과 마찬가지로 돌봄의 사회화 및 공공화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영역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 초등학교생 자녀 중 보호자 없이 자녀 혼자 집에서 지내는 평균시간을 조사한 결과, 43.4%의 아동이 적어도 1시간 이상 혼자 지내고 있으며, 13%의 아동은 방과후 3~4시간 이상 혼자 지내고 있다. 특히 맞벌이가구 자녀가 3시간 이상 혼자 지내는 비율이 높았으며, 저학년 아동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높아 양육자의 불안수준도 높다(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6월 전국 초등학교의 92%에 해당하는 5,430개 초등학교에서 6,639개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000개 교실(유치원 포함)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¹⁰⁾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 지원예산은 2,195억원으로 한 교실당 약 3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국회 보도자료, 2011). 초등돌봄교실은 확대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온종일 돌봄교실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3) 정책과제

- 학교당 평균 1.2개 밖에 없는 돌봄교실 수 증설
- 18:30 마감인 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19~20시로 확장

10)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온종일 돌봄과 토요 돌봄 지원

3-2. 노인돌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공공성 확대

1) 사회문화적 인식

- 노인돌봄의 1차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하다. 정부는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서 노인 돌봄을 위한 재정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원이 한정적이므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및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가족 내에서 노인돌봄을 수행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 아동·노인 등 돌봄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은 점점 확대되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전국민이 가입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4.78%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수납하는 보편적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등급 판정에 의한 중증 노인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경증 노인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면서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
-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마련 이후 서비스 공급기관 부족을 우려하여 노인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교육기관을 신고제로 입법화한 결과, 현재 시설과 인력이 과잉 공급되어 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했다. 장기요양기관들은 더 많은 수급자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불법, 편법을 동원하여 수급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이를 요양보호사 임금에서 삭감하고 있다.
- 2008년 7월부터 2011년 초까지 노인장기요양시설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재가기관의 경우 2009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약 162% 증가했다. 재가요양기관은 시행원년 대비 8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공에서 직접관리·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시설의 경우도 민간위탁 형태로 공적운영기관은 5% 미만이다. 요양시설의 경우 매해 각각 71%, 44.3%, 12.3%씩 증가하여 시행 원년 대비 3배 가깝게 증가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2008년에는 37만 6천명에서 2010년 75만 9천명으

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등급인정자 중 실제 서비스 이용자 비율은 각각 약 19%, 37% 수준이다.

3) 정책과제

- 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를 경증 노인까지 포괄
-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본인부담금 20%를 10%로 완화, 식비 등 비급여 항목 급여화
- 설립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
 - 현행 노인요양기관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
 - 개인설립 금지
 - 부당급여 청구 회수 제한
 -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이용자를 돌보고 있을 경우 설립신고 취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
 - 공공노인요양시설을 전체 시설의 30% 수준으로 확보
 - 현행 민간시설의 경우 단계적으로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
-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요양기관 설립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재가요양기관 및 요양시설을 지자체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

2.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기준으로 요양보호사는 110만명이 배출되었으나 취업인원은 24만명 수준으로 5배의 인력이 추가 배출된 상태이다.
- 요양보호사는 장시간 노동, 최저생계비 수준의 저임금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일 자리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 재가요양보호사 절반이 60만원 이하의 월 급이며, 시설요양보호사의 절반 이상이 하루 12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62%는 월급이 120만원 이하이다. 또한,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휴가수당 미지급이 77.8%, 주·휴일 노동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이 8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기도 했다(한국보건자원연구원).
-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12시간 맞교대 혹은 24시간 격일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지어 24시간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형 시설도 있다. 현행 법률기준으로는 요양보호사 1인이 입소자 10명을 담당(8시간, 4조 3 교대 경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2교대제의 평균임금은 1,232,4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급 3,950원이며, 재가 요양보호사의 평균 급여액은 821,519원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월 평균 646,970원 ~ 969,697원으로 조사되었다.
- 근로기준법 위반 등 노동권 사각지대(법정 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 재가장기 요양기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 사례 다수)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재직업병 및 성희롱 위기에 처해 있다.

2) 정책과제

- 생계가능한 일자리 보장을 위해 현행 단시간 비정규직 재가요양보호사의 8시간 상근제, 최소 주 15시간 이상 노동 보장
-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8시간 노동 보장
- 파견금지 유예조항 즉각 폐지
- 요양기관에 대한 노동법 준수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 강화

3.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OECD 국가에서는 기본 입원서비스인 환자간병을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환자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 사실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월 지출비용이 약 190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가족간병을 위해 휴가(26%), 휴직(32%), 심지어 퇴직(6%)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를 여성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취업여성의 경우 심적,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특수고용형태로 40대 후반에서 60대까지 저소득층 중고령 여성이 대부분인 간병노동자는 24시간 내내 주6일(주144시간)동안 일하고 있으나, 시급은 3,000원 미만이다. 1일 8시간 노동으로 환산할 경우 월 5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자 간병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환자로부터 감염되는 등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고, 치료기간 동안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2) 정책과제

-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
- 병원에서 직접 고용을 통해 간병노동자의 노동조건, 임금수준이 안정화 되어야 한다.

3-3. 노후 소득보장

1.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1) 사회문화적 인식

- 노후는 개인이 준비해야 하며, 가족(특히, 자녀)이 부양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통념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하고 있으며,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부모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다(부모-자녀 동거비율¹¹⁾ : 2002년 42.7% → 2010년 35.3%).
- 노후 소득보장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기여를 해온 국민들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노인의 빈곤율과 자살율 OECD 1위 : 한국노인의 빈곤율¹²⁾은 45%로 OECD 평균 13.3%의 3.4배이다.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6.6%로 스웨덴의 6배, 미국의 2배이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65세~74세 노인자살률은 81.8명으로 일본(17.9명)과 미국(14.1명)에 비해 4~5배 이상 높다. 높은 자살율은 높은 빈곤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여성노인 1인가구의 높은 빈곤율 : 노인 1인 가구 중 여성노인 1인 가구비율이 79.9%이며, 이들의 연간 가구소득은 평균 736만원이다. 소득증가율은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노인 가구 소득 증가율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다.
- 2012년 현재 노인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94,300원(부부가구 150,900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53,354원의 17% 수준이다.

3) 정책과제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부부가구 감액 폐지
-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분담능력을 고려하여 일부 지자체 부담 예산을 국고로 지원

11) 2010년 사회조사(통계청)

12)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 50% 미만

2.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및 여성의 국민연금 개별 수급권 확보 방안 마련

1) 사회문화적 인식

- 사회보험 제도는 생산노동에 기여하는 생계부양자의 위험을 개인과 사회가 분담하기 위해 본인의 기여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기여하지 않으면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다.
- 사회보험 제도가 생산노동에 기여한 남성생계부양자의 사회적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지만, 저출산·고령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남성생계부양자만을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하는 제도로써는 한계에 직면했다. 생산노동과 재생산 노동에 기여한 사회구성원 전원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¹³⁾

-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는 73.8%이며, 이중 여성 64%, 남성 81.1%이다. 비임금 근로자의 가입율은 69.5%로, 이중 여성 49.7%, 남성 77.4%이다. 여성 정규직의 73.1%, 비정규직의 51.1%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반면, 남성은 정규직 88.3%, 비정규직 60.6%가 가입했다. 국민연금 가입률에서도 성별 격차 및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1가구 1연금 제도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배우자와 혼인상태가 유지돼야 노령연금 수급시 피부양자가 되거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수급자가 된다. 그러나 유족연금 평균 수급액은 23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 국민연금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기여자가 연금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결혼기간 중 납부한 보험금의 1/2을 청구할 수 있는 ‘이혼시 분할연금’을 인정하고 있다.

3) 정책과제

- 직역 연금에서 이혼시 분할연금제도 인정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소득비율 조정
- 장기 과제 : 여성의 개별 수급권 보장을 위한 1인 1연금제도로 개혁

13) 출처: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여성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확대 방안’

주거 / 의료 / 교육

4-1. 주거

1. 주거양극화, 저소득층의 월세부담 완화

1) 사회문화적 인식

- 한국 국민들은 주택의 소유여부는 개인 능력에 따른 것이며, 매매를 통한 재산 증식과 노후보장을 위해서 반드시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평생을 자기 집 마련에 바치고 있다.
-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해 온 주거정책 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 안전하고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현재, 자가가구와 전세가구는 2008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월세가구(보증부월세 + 월세 + 사글세)는 3.2% 증가했다(2010년 자가가구 : 54.2%, 전세가구 : 21.6%, 월세가구 : 21.4%)¹⁴⁾.
- 경기침체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소득 계층별 주거수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진 탓에 저소득층의 월세 거주가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월세는 줄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전세나 자가(내집) 거주가 늘었다.
- 현행 월세제도는 집주인 마음대로 가격조정이 가능하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하며, 월세가 상승하면 세입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 월세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14) 국토해양부,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2011

※ 2008년 ~ 2010년 전국 소득계층별 주택 점유형태 및 변동현황 단위 : (%)

구분(전국)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2008년	저소득층	51.9	16.84	20.48	3.83	2.71	4.25
	중소득층	54.7	27.75	13.42	0.88	0.82	2.43
	고소득층	69.36	22	6.28	0.29	0.27	1.8
2010년	저소득층	46.85	16.78	25.76	4.06	2.81	3.74
	중소득층	54.02	25.05	17.13	0.96	0.55	2.3
	고소득층	69.5	22.96	5.61	0.32	0.19	1.42
구분(전국)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무상
변동 현황	저소득층	-5.05	-0.06	5.28	0.23	0.1	-0.51
	중소득층	-0.68	-2.7	3.71	0.08	-0.27	-0.13
	고소득층	0.14	0.96	-0.67	0.03	-0.08	-0.38

* 저소득 - 소득 1~4분위, 중소득 - 소득 5~8분위, 고소득 - 소득 9~10분위(상위20%)

(2011,부동산써브)

3) 정책과제

- 공공계약 임대주택¹⁵⁾ 도입 및 공정임대료(인상 상한제) 시행으로 민간영역의 전월세 안정 도모
- 전세보증금 지원 현실화 : 임차인에 대한 전세자금지원 한도를 보증금 수준에 맞게 확대
-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을 통해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엄격하게 제한

15) 임대주택 등록 후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감면과 집수리 비용 지원 등을 전제로 공공과 임대기간 장기화, 공정임대료 계약

2.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재정립

1)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에 변화된 한국의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은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6㎡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1인 가구 최소면적은 25㎡이며, 미국은 침실면적만 11.15㎡이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는 184만 가구로 총가구 대비 10.6%이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 반지하, 옥탑 거주비율은 3.96%(국토해양부, 2010년도 주거실태 조사)에 이르고 있다.

2) 정책과제

- 최저주거기준 현실화 : 인체공학적 차원의 최소주거공간과 생활양식 등을 고려하고 구조, 성능,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 저소득 가옥주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자금 지원 확대
- 비주택(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거주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3. 여성의 안심주거 보장하는 주거정책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기혼가구를 우선으로 대출, 입주우선권을 부여함에 따라 비혼, 비혈연 가구는 주거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 1인 가구의 53.5%가 여성으로 이중 70세 이상에서 비율이 높으며, 주로 단독 주택에서 거주(59.4%)하고, 점유형태는 월세(39.5%) 거주비율이 가장 높다.
- 가구주 성별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이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가(自家)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세비중도 남성가구주보다 낮는데 비해 월세는 약 2배 수준이다. 여성가구주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아 주거안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가구주 성별 주택점유형태〉

(단위: %)

구분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자가	41.0	57.5
전세	20.1	22.0
보증부 월세	29.2	15.4
무보증 월세	3.2	1.7
사글세	2.5	1.0
무상	4.0	2.3

(자료 : 국토해양부, 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2) 정책과제

- 35세미만 1인 가구 전세자금 융자 :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지원대상 확대
- 공동경비가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 한부모, 독거노인, 장애여성, 저소득 비혼여성의 주거 접근성 확대
- 1~2인용 공공원룸텔 확충 : 공공기관 증축, 폐교위험에 처한 학교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수, 민간 고시원, 모텔 매입 등을 통해 주거안정화 정책 추진
- 비혼 여성공동체, 공공임대주택 신청자격 부여 : 3년 이상 독립세대로 3년 이상 거주하고, 3인 이상이 공동가구를 형성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가족형태를 정책에 반영

-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여성가구의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지원
- 공공지원형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 가구유형별로 적합한 공동주택 사례 발굴, 주택개량 시범사업,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공동 경비 등

4.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료 차등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소득분위 1-4분위) 등 소득하위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원가를 반영한 임대료 산정방식으로 인해 1분위 소득계층의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어섰다.

2) 정책과제

- 계층, 지역, 가구유형 등을 반영하여 보편적 복지원칙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소득7분위 중산층까지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 공급
 - 보금자리주택 분양분을 중산층용 장기전세로 대거 전환
- 소득별 임대료 차액 보존제도 도입 :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률을 반영하여 25 ~ 30%가 넘을 경우 임대료 차액을 주택 바우처 방식 보존
-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의무 건설 부활, 재건축·재개발시 임대주택 공급비율 확대
- 강제퇴거시 인권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련 법 개정

4-2. 의료

1.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선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4%로 OECD 평균 85%보다 낮아서 의료비 본인 부담이 높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취약함으로 인해 중증질환에 걸릴 경우 가계가 어려워져서 의료비 지출은 가계 파탄의 3대 원인으로 조사되었다(기초수급자 편입 사유 : 실직 29%, 수입감소 22%, 의료비 지출18%/ 보건복지부, 2011).
-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의료보장도 취약하여 빈곤층 인구가 11.5% - 15.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에 이르고 있지만, 국가가 무상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빈곤층은 인구의 3.4% - 3.7%에 불과하여 최소한 300만명 이상이 빈곤상태에 있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 전체 의료기관의 약 90%가 영리추구적인 민간 병의원이다. 2000년 전후로 인구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섰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지만 병상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각종 고가 의료장비(CT, MRI, PET)의 단위인구당 보유대수는 OECD 평균 2배 수준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행위별 수가제, 무분별한 비급여 서비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의료기관 간의 과당 경쟁, 수도권-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야기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15.5조인데 비해 국민이 민간의료보험료에 지출한 부담액은 3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여성의 경우, 피임, 낙태, 요실금, 산후 조리 등은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반면, 의료계 운영을 위해 자궁 적출술, 유방절제술, 갑상선 수술 등은 과도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2009년 국내 자궁절제 수술율은 430.7건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유방절제 수술률은 102.6건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0건을 넘어섰다.

2) 정책과제

- 의료비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
- 피임, 안전한 낙태, 요실금 등 여성관련 질환 및 산후조리에 건강보험 적용
- 공공병원 30% 확충 및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
- 의료급여 확대로 빈곤층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 의료병원 도입정책 폐기

4-3. 교육

1. 반값등록금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53만원, 국공립 등록금은 444만원으로 2001년 대비 각각 57%, 83% 증가했으며 물가상승률의 2-3배로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임금 360만원을 2-3개월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
- OECD 국가들의 평균 등록금 부담률이 소득대비 1/10 정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1/4이나 차지하고 있다. 등록금 외에 각종 교육비, 주거비, 생활비, 연수비 등을 고려하면 대학생 1인당 연간 2-3천만의 비용이 발생한다.
- 등록금이 높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립대학들이 부문별하게 적립금을 쌓아두고 관행적으로 ‘예결산 뺑뚱기’ 행태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대 적립금은 이미 2009년이 무려 10조원을 돌파했으며, 10년 사이에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 무분별한 적립금 적립을 막아야 한다.

2) 정책과제

-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를 통한 반값 등록금 실현
 - 법적으로 ‘등록금 기준액(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360만원 수준)’을 설정하고, 기준액을 넘어 상한액 범위(가령, 기준액의 1.2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때는 교육당국의 심의와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함
 -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재정소요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도록 하여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정부책임형 사립대 체제 구현
- 사립대 적립금 규제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 1회계연도 적립금과 누적적립금 총액 제한
 - 적립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등을 일정한 규모 제한

2.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및 고교의무교육 시행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5% 가량으로 OECD 평균인 1.1%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한국의 초·중·고 교육 정부재원 의존율은 77.8%로 OECD 평균(87.6%)보다 9.8% 낮다.
- 2008년 기준 우리나라 고등학교 취학률은 98.3%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고등학교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중소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중산층 가구만 고등학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부터는 실업계고의 경우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어 일반계고를 다니는 서민·중산층 학생과 학부모들만 학비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전체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는 약 2조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공무원 자녀(약 910억 원), 기초수급대상자(약 1,182억 원)에게 지원되는 교육비와 2011년 기준 실업계고 무상교육예산(3,159억 원)을 제외하면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통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데 1조 5,000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 정책과제

-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 발전 모색
-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전환

여성 건강

1.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낙태)¹⁶⁾ 허용

1) 사회문화적 인식

- 경제적인 이유로,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피임법을 몰라서 등의 이유로 불법 인지도 모르고 일상화되어 온 임신중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린다. ‘어쩔 수없는 선택’이라는 입장과 ‘생명 보호’가 그것이다.
- "원하지 않는 임신은 여성과 그 가족들에게 특별한 건강위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1987년의 〈가족계획을 통해 여성과 아동의 더 나은 건강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회의〉 선언에서 보듯이, 출산시 정상적 양육이 불가능하다면 임신중절은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가 되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적정 피임교육 부재, 출산과 관련한 사회기반의 미비로 낙태율은 세계 1위이다. 2005년 실시된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한국에서 시행된 임신중절 건수 342,233건 중 모자보건법에 따른 합법적 시술은 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불법화로 비밀리에 행해지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는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향후 출산의 질(quality)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허용범위가 가장 큰 ‘여성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도 유럽 국가 중 70%에서 시행되고 있다.
 - 영국 : 여성과 태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협이 있을 때, 여성의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필요성이 제기될 때 허용. 의사 2인이 의학적 근거를 가

16) 여성연합은 “태아를 떨어뜨린다, 혹은 지운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낙태’라는 단어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중립적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지면 가능.

- 네덜란드 : 여성의 요청에 따라 임신중절이 전면 허용. 병원이나 인가받은 클리닉에서 시행. 신중한 판단을 위해 상담 진행 후 5일간의 대기기간을 통해 결정.
- 유럽연합 : 2008년 4월 유럽의 47개 회원국에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권을 부여하기 위한 결의문 초안 완성. “임신중절금지하는 임신중절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지 않고,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것은 대부분 비밀리에 행해지는 임신중절로 이어지며, 이는 여성에게 더 많은 정신적 외상을 일으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권고(2011. 7. 29) :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해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

3) 정책과제

- 낙태에 관한 여성의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 사회경제적 사유¹⁷⁾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모자보건법 개정)
- 안전한 낙태 의료체계 마련, 낙태이후 케어 및 피임 지원
- 피임교육의 공식화

17) 출생에 따른 임부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 핀란드 : 출산이나 육아가 산모나 그녀의 가족의 생활조건, 그리고 여타 상황과 관련하여 중대한 부담을 주는 경우. 산모가 17세 이하이거나 40세 이상인 경우, 이미 4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 헝가리 : 임부가 미혼이거나 지속적인 별거생활 중이거나 35세 이상이거나 임부와 그 남편이 자기 소유의 집이나 독립적인 셋집을 가지지 못한 경우로 규정.

2. 여성의 재생산 건강 보장

1) 사회문화적 인식

- 여성은 몸은 경제발전과 과학발전 등 국가성장과 맞물려 사회, 문화, 규범 등에서 억압과 통제, 동원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여전히 미래의 사회노동력 제공을 위한 아이의 생산체로만 대상화되고 있다.
- 여성주의는 1968년 이후 ‘재생산권’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커플과 개인들은 그들 자녀의 수와 터울을 자유롭고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후 임신·출산권을 넘어 피임, 낙태권까지 포함하는 광의로 재개념화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성이 자신의 신체와 정신에 관련된 인권, 평등권, 재생산 건강권, 모성보호권, 자기결정권, 프라이버시권에 있어서 주체성을 확보,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한 사회적 동의를 바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건강은 개인보다는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획득하는 사회적 산물임을 명확히 함으로서 경제활동, 교육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 보편적 권리로 여성건강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의 여성건강 정책은 피임, 낙태, 폐경기 질환, 여성 생식기 질환 등 여성 특유의 건강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임신과 출산에 국한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임신 전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연계되는 지원구조는 마련되지 않았다.
- 조기폐경 여성이 증가하고, 갱년기 이후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등의 발생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갱년기가 단순히 한 개인이 겪는 신체적·심리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 시기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교육 및 자조모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유해매체를 통해 습득한 잘못된 성지식은 성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있으며, 학교 성교육의 내용 또한 피임, 낙태, 성폭력 대처방안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 교육방식과 빈도 및 교육내용의 한계, 낙태 및 피임에 대한 교육이 금기시되고 있는 현실은 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3) 정책과제

○ 재생산건강 통합관리

- 임신과 출산 및 산후조리, 출산 이후의 지원까지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 구축
- 피임, 임신 결정, 임신 전 관리, 출산까지의 관리, 출산 이후 우울증 및 신체건강 지원, 모유수유 및 신생아에 대한 기초교육, 출산 후 피임정보 제공 등 임신, 출산에 관련된 전반적 서비스 체계관리 및 정보제공. 출산 후 방문서비스 지원
- 고연령 임신층에 대한 특별 관리 및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신 언어로 된 임신·출산 정보제공, 이주여성가족을 대상으로 한 출신국의 임신·출산 문화 및 음식 정보제공, 병원도우미 지원을 동일 출신국 여성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

○ 안전한 피임과 섹스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성교육, 낙태·피임·성폭력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실행, 청소년들의 직접평가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
- 교수자의 자격요건, 전달방식, 빈도, 규모, 내용의 질 관리 및 평가제도 마련
- 학교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및 부모교육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사후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1) 사회문화적 인식

-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할 경우,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생명 경시 풍조 조장, 임신중절, 성병과 골반염 등의 발생률을 높일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다. 또한 남용할 경우 경구피임약에 비해 고용량의 호르몬이 함유되어 건강상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 외국의 사례처럼 안전성 확보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절차적 대안을 갖는다면 원치 않는 임신과 안전하지 못한 임신중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 국내에서는 응급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고, 비급여 품목으로 고가이다. 또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성교 사실을 전제로 한 응급피임약 처방을 위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의원 방문은 심리적으로 부담되며, 2만원이 넘는 가격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 유럽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국가가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지정, 필요시 구입할 수 있으며,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은 이용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최근 2009년 8월부터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에서도 응급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었고, 아일랜드 등도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
- 안전성 확보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유럽은 약사와 상담 후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캐나다는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약사가 의무적으로 기록하여 환자의 오남용을 줄이고 있다. 또한 해외 연구들¹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응급피임약의 구입이 용이해져도 청소년이나 성인 여성에 있어 이용하는 피임법이 변하지 않았으며(Gold et al, 2004), 영국의 경우에도 우려했던 응급피임약의 남용이 흔하지 않았다(Rowland et al, 2000).
- 국내 ‘피임연구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응급피임약 복용률은 5.6%로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28~34세 기혼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¹⁹⁾된 조사에서는 '향후 구입의향'이 85.7~90.3%, '상비

18) 강희선(2006) 연구에서 재인용.

19) 2005, 포커스리서치 <사후피임약 소비자조사 보고서>

필요'가 40.0~61.3%로 조사되었다.

3) 정책과제

- 의사 외에도 약사 상담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도록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오남용 우려는 캐나다의 사례처럼 설문·기록을 의무화하여 단계적 조절), 의사 진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 응급피임약 광고에 대한 감시 및 철저한 판매관리, 부작용 모니터링 실시

4. 신체왜곡 : 미용성형 및 다이어트와 여성건강

1) 사회문화적 인식

- 현대사회에서 외모가꾸기와 관련된 산업은 미용성형을 여성의 자기배려, 자기개발로 해석하면서 여성의 독립과 힘의 과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미용성형을 여성이 상품을 소비할 능력, 자신감, 성적주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 그러나 과거에는 미용성형이 비난의 대상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성형수술자에 대한 낙인이 약화되는 것 같지만, 몸에 대한 차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외모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은 본인의 몸을 투자대상으로 혹사시키고 있으며, 미용성형 기술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주체로서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디어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성형, 혹은 미용 산업화 문제의 책임을 여성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미디어와 각종 매체를 통한 외모지상주의 확산과 취업시장에서 외모가 경쟁력이라는 사회문화는 우리나라의 뷰티시장 규모를 약 26조, 그중 다이어트 관련 1조, 미용성형이 5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아시아는 매년 20%씩 성장하고 있으며, 선두에 우리나라가 있다. 이는 국가적인 미용성형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조성된 것이다.
- 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ISAPS)에 따르면 인구 1만 명당 성형수술 순위는 한국이 133건으로 헝가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2010년 연간 총 성형수술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세계 7위로 전체 인구수 대비 성형수술 비율이 상당히 높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미용성형은 의료산업화와 광고, 미디어와 결합해 급속하게 성장했으며, 최근 한국에서 성형수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보편화되었다.
- 또한 공식의료시장이 아닌 성형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근로 중 휴게시간(1시간 이내)을 이용한 간편 시술 등이 유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신체관리와 외모에 대한 과도한 기준에 시달리면서 성형의료산업의 마케팅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용성형수술이 연간 몇 건이나 성사되는지, 누가 왜 어떤 수술을 받는지, 시장 규모는 어느정도인지 등에 대한 국가적인 조사

는 아직까지 없다.

-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신청건수 4천171건 중 성형외과 접수는 2008년 6.9%에서 2009년 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부작용과 악화가 53.7%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이 13.4%, 장애가 11.3% 등이다.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 사고의 절반 이상이 마취 부작용이며, 성형산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마취 전문의가 아닌 의사나 간호사가 전신, 정맥마취 등을 시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그 원인이다. 특히, 간편한 성형수술 시 전문적인 상담절차나 부작용등 위험성에 대한 사전고지가 불충분하여 여성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 한국성형의료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여성채용에 관행에 관한 개선방안’(2006,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공식적인 채용공고에 용모기준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공공기관의 46.7%, 민간기업의 36.8%가 용모를 면접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80%, 민간기업의 85.4%는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용모로 차별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차별에 관한 여론조사(2006, 여성가족부)에서 미취업 여성의 37.4%가 구직과정에서 용모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취업응시자의 92.2%, 기업 인사 담당자의 78%, 미취업 여성의 94.2%가 여성 채용시 용모를 중시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3) 정책과제

- 의료진 설명의무 준수, 의료산업에 대한 제한 및 성찰
 - 성형수술시 의료법상 의사의 설명의무(부작용 등) 준수를 위한 구체적 틀 마련 및 다양한 의료분과의 미용성형 시술에 대한 제한
 - 지자체 및 국가적인 지원을 통한 미용성형의료관광산업육성 중단
 - 성형의료산업의 규모와 실태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시행
- 과장된 의료 광고 등 미디어에 대한 규제
 - 과장광고, 소셜커머스를 통한 반값할인 제한, 온라인 광고 금지
 - 마른체형 선호 광고 및 미디어상의 성형수술 간접광고·홍보 제한
- 고용시 용모차별에 대한 규제 : 입사지원서에서 직무관련 능력 외에 용모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삭제

5. 여성건강권 인프라 구축

1) 사회문화적 인식

- 여성의 몸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없이 남성과 동일한 신체로 혹은 재생산기능을 여성신체의 전부로 보며 질환과 치료관련 분야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가적 차원의 인식이나 노력이 부족하여 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1975년 ‘UN세계여성의 해’ 제정 이후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의 하나로 자리하기 시작했고,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여성건강은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안녕을 포함하여 여성의 삶에 대한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에 의해 결정된다고 정의하면서 여성 건강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1999년 유엔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건강이 모성보호에서 벗어나 여성자신의 권리찾기로 정의한 바 있으나, 국내의 여성발전기본계획에는 국가정책으로서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여성건강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1,2,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건강 관련한 분야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2차 기본계획은 여성건강 인프라 구축이 포함했으나 이행이 부실했고, 3차 기본계획은 그마저 축소된 채 주로 모성보호에 초점이 맞추고 있다.
- 여성과 남성의 건강은 생리적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처하고 있는 사회적 여건과 관련이 있으며, 의료서비스 접근, 동일질병에 대한 증상차이(성인지의학)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를 밝혀내고 차이가 성불평등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기반마련이 시급하다. 즉, 젠더차이를 고려한 보건정책, 보건연구, 사회적 건강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고려한 정책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 외국의 경우 보건분야 전반에 걸친 성인지성을 강화한 정책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호주와 캐나다는 여성의 주요 건강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건강 전략수립, 이행을 위한 전담부서 및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다.
-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센터건립은 실태와 현황 파악뿐 아니라, 해당 지역내 여성들의 의료서비스 욕구를 알고 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여성건강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NGO와의 긴밀한 협조관

계를 유지하면서 정부 및 연구소와 공동으로 여성건강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 축적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없으며, 지역차원에서 여성건강에 대한 사례연구나 실행단위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정책과제

○ 성인지적 건강정책 인프라 구축

- 여성건강 및 건강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을 부여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마련하고 건강정책의 우선순위 및 예산배분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검토
- 국민건강증진계획 등의 건강정책에 성평등 목표를 부과,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시스템 및 이행점검 방안 마련
- 건강지표 및 통계에 성 및 다른 사회적 요인(연령, 소득, 지역 등)을 포함한 포괄적 통계 생산, 여성건강에 관한 정보제공(리플렛, 잡지 등), 건강관련 연구 전체 중 젠더 차이를 분석한 연구를 파악하여 예산의 비중을 확대
- 건강연구 심사과정에서 제안서의 젠더차이를 명기하고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유럽 시행중)
- 시민사회차원에서 건강의 젠더차이를 연구하거나 활동하는 모임에 대한 지원등 네트워크 형성지원

○ 지자체 별 여성건강센터 설치

- 의료데이터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축적하고 이를 생산, 가공, 출판하기 위한 단위로서 정부부처의 설치와 더불어, 실제 지역차원의 실행단위
-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의약품 관련 연구지원 및 육성을 담당하는 성인지 의약품 연구센터 설립

6. 의료서비스 인력에 대한 교육

1) 사회문화적 인식

-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의사와 환자는 위계적 관계이며, 특히 여성환자는 위계적 관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특히 성폭력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병원 방문 시 의료진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한다. 또한, 많은 성소수자들은 국가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의한 차별에 노출되어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의료인을 배출하는 의과대학의 경우 대부분의 강의는 의과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성인지교육, 인권교육, 의료서비스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 법제도,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현재 예비의료 인력을 포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개념, 인권개념,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사회과학대학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 등 보건인력과 미래의 사회정책 수립자를 대상으로 ‘젠더와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사회적 요인, 의료서비스 차원을 포함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 정책과제

- 젠더적 감수성 고양을 위한 교육 실시
 -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방지교육, 여성환자를 위한 젠더적 감수성 고양 교육 실시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지원을 위한 인식교육 실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여성노동자의 성폭력 피해 등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 고양 :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를 위해 의과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상담가 및 담당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여성 폭력

6-1. 여성폭력분야 공통과제

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1) 사회문화적 인식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집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여전히 개인적 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인권 차원에서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교육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공교육 내 여성폭력예방교육
 - 학교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에 대해 일정시간을 배정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실시해야 하는 각종 예방교육은 40여 종류가 훨씬 넘어, 실제로는 가정통신문이나 전단지 배포로 교육을 대체하거나, 교장훈시 또는 일회적 특강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학교의 폭력예방교육은 대부분 집단교육으로 실시되어 교육효과가 미미하며, 이마저 ‘아동성폭력예방’과 ‘성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통합적이고,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여성폭력에 접근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온정주의로만 귀결될 위험이 있다.
 - 여성폭력예방교육은 중앙정부 차원의 기획과 조정이 필요하며, 학교와 부모,

지역사회까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권교육의 평생교육체계구축 필요

- 유엔 인권교육프로그램은 학교영역, 공공기관 영역, 시민사회 영역으로 인권 교육 영역을 구분한다. 학교영역에서는 학생(유치원생부터 전문직원훈련원생 까지 포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의원 등 입법관계자, 사법부,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일반시민, 전문 집단,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19일 유엔총회는 세계인권교육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유엔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 2차 시기 행동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가입국은 인권교육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를 2015년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폭력예방교육은 학생 중심으로만 실시되고 있어, 교육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여성폭력예방교육은 성인지적 감수성, 인권감수성 증진을 기본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는 인식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에 전 연령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령기에 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의무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의했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 17대 국회 마감과 함께 폐기되었고,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나 역시 폐기되었다. 대상별, 연령별 체계적인 인권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률이 필요하다.

3) 정책과제

-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 제정
- 여성폭력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대상별, 연령별 의무교육체계 수립
-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등 폭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마련
- 지역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 등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합적 폭력예방교육 실시

2.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 캠페인 실시

1)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각각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캠페인과 공익광고는 아동성폭력을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어 매우 한계적이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차별의 극단적 표현으로 통합적으로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관련 공익광고의 지속적 제작 및 송출, 대국민 캠페인 등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한편, 일상적 인식제고를 위해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여성비하적 표현, 폭력 허용적 표현 등을 모니터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 방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생명 존중,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에 관한 윤리적 수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제와 모니터링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2) 정책과제

-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광고 제작 및 공중파 방송 송출, 캠페인 실시(최소 연 4회)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련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 실시
- 여성차별적, 여성비하적 방송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상벌 실시
- 시청자 모니터 프로그램 활성화

3.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 전면 개편

1) 사회문화적 인식

- 정부의 복지서비스는 경제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이 간과된 채, 복지 수혜자로만 대상화되고 있다.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로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개인정보 수집과 집적으로 인한 피해자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정부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의 가장 기본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허물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폭력피해자의 직업훈련 예산이 2011년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면서 피해자의 주민번호 입력 등이 필수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신변보호가 최우선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은 ‘그림의 떡’이 되었다.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주민번호를 대체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입소자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산관리번호의 경우 결국 주민등록번호와 연동하여 관리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피해자 임이 드러났을 경우 사회적 편견과 낙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 전산관리번호에는 시설번호가 포함되어 소재지 노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고려하면, 시설이용 종료 후 5년간 입소자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3) 정책과제

-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전산망 사용 중지
- 여성폭력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및 관련 부처를 여성가족부로 단일화

4.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안정화

1)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범피기금’)으로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약 600억 규모의 범피기금 예산 중 여성가족부 수행 사업예산이 30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정책은 여성가족부 사업에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일반 회계가 아닌 기금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범피기금의 사업으로 편성되면서 사업 수행주체와 기금 운용,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은 여가부가 주체가 되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자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범피기금으로 수행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다.
- 범피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법무부를 소관으로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예결산 심사를 하고,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대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법무부 또는 각 개별 부처의 상황과 이해 정도에 따라 변할 가능성이 있고, 예산으로 확보되지 않는 기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이다. 실제 여가부는 사업 운영만 담당할 뿐 실제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는 상황이다.
- 형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그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여성가족부가 현재 한국사회의 성차별,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확한 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사업 수행 주체와 기금 운용, 관리 주체가 다른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처 간 예산 싸움만 반복되거나 효율성과 기금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2) 정책과제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을 여성가족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

5. 여성폭력 범죄에 대한 낮은 신고율과 유죄 선고율 개선

1) 사회문화적 인식

- 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이 심각하여 신고율은 물론 유죄 선고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 가정폭력은 ‘폭력범죄’이기 때문에 신고해서 법적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인식과, ‘가정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상담이나 치료로 해결하는 게 낫다는 인식이 상충하고 있다.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범죄는 개인의 문제나 치부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은 피해자의 개인적 치부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성폭력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그 신고율이 12.3%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친고죄 조항으로 인해 고소 취소시 해당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과도하게 합의를 종용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기소율 역시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 지난 1년간 부부사이에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 폭력이 발생한 비율은 53.8%²⁰⁾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건은 매년 1만 2, 3천 건 정도에 불과해 신고율이 극도로 낮으며, 기소율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3) 정책과제

- 성폭력 범죄 신고율과 기소율 개선을 위해 친고죄 전면 폐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조치 마련

20) 2010년 여성가족부,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6-2. 성폭력

1. 친고죄 전면 폐지

1) 사회문화적 인식

- 성폭력 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라는 인식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의 목적은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심각히 확산시키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현재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은 폐지됐으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존치하고 있다.
- 강간 기소율은 16.9%, 강제추행 기소율은 38.6%에 불과하며, 피해자-가해자 합의 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비율은 강간 57.6%, 강제추행 50.1%이다(2007년). 그러나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의 기소율은 강간 등 상해가 79.7%, 강간 등 치상죄는 48%로 나타나는 등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 친고죄 조항의 범죄는 고소 취소시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과도하게 합의를 종용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게 된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친고죄 조항과 이로 인한 낮은 기소율과 유죄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3) 정책과제

- 친고죄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
- 고소율, '공소권 없음' 처분, 불기소 사유에 대한 경·검찰 통계 공개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전면 폐지

2. 수사·재판 과정의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1) 사회문화적 인식

-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가해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은 높은 편이나, 이에 비해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인식은 여전히 낮다. 성폭력을 ‘정조’ 또는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로 이해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한다는 편견 등으로 인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보장은 여전히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 후 사법기관, 언론, 의료기관, 가족, 친구 등의 부정적 반응과 사생활 침해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이다. 특히 수사·재판담당자들의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성 부족은 2차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8, 2009년 상담통계에 의하면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의 25% 정도가 사법절차상 2차 피해의 부담감과 고통을 호소했다.
- 현행법 체계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전담재판부 도입, 진술녹화제 도입과 비디오 등 증거 장치에 의한 심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등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도입된 법 규정과 제도들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무의 변화를 크게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 이력을 심문하거나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도 있어 2차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은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및 채택을 제한하고 있고, 영국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정책과제

- 법률조력인 제도²¹⁾를 성인까지 확대
- 형사사법 담당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예산투자
- 수사, 공판 절차에서 신문내용 제한(피해자 품행, 평판, 직업, 성관계 이력 등)

21) 성폭력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이 피해자 본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는 국가 지원 전문 변호사 제도. 형사상 피해자 변호인이면서 민사(가사) 소송대리인 권한. 수사기관 출석 및 조사 참여, 증거보전절차 참여, 공판정 출석 및 증인신문 참여, 송치 후 담당검사 및 기소 후 담당재판부에 의견개진권 등을 가짐.

3. 형법 성폭력 처벌조항(32장) 전면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에 관한 법적 조치가 여러 법률에 걸쳐 존재하고 있어 혼란 야기
 -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해 형법에는 간략한 규정만 두고, 가중적 구성요건과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 법제가 수 개에 나뉘어 존재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조차도 적용 법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구성요건이나 양형 등에 있어 체계정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성폭력 관련 법조항을 형법으로 흡수하여 전반적인 체계를 수정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성폭력에 대한 관점이 부재한 개념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와 자존감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현행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자기결정권’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 협소한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 : 성폭력은 성별과 상관없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범죄인데, 현행 형법은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 즉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직접 삽입되는 성교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남성은 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 유사성교행위나 이물질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는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분류되어 강간죄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있는 상황이다.
- 외국의 입법례나 국제법상 강간 규정에서는 강간죄의 행위에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 독일 : 여성뿐 아니라 모든 개인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주체로 승인(형법 제177조), 성교 또는 신체삽입과 연관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 프랑스 : 강간을 사람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로 규정(제222-23조)
 - 미국 주법 : ‘성교’를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미국 뉴저지주 형법은 ‘sexual penetration’을 독일법의 신체삽입행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
- 현행법상 ‘법률상의 처’가 부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해석상으로도 부

녀는 혼인여부를 불문한다고 확립되어있으나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강간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아내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를 가중 처벌한다.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부부강간 범죄화와 친고죄 폐지를 권고했다.

2) 정책과제

- 형법 32장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 죄”로 변경
-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행위범주에 유사성교행위 포함
- 부부강간죄 및 비동의 간음죄 도입

4.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1)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 범죄를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는 고소기간의 개념과 중첩되어 공소시효와는 별도로 법적 해결가능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총 상담건수 중 약 10%가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성폭력 피해의 경우 어린 나이로 인한 인식능력의 부족, 적절한 성교육의 부재로 사건인지가 늦어지거나, 자책감과 수치심, 주위의 비난과 불신,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고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2011년 개정으로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강간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나,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유지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도과된 수많은 사건의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회피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정책과제

-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소시효 배제 대상 확대

6-3. 가정 폭력

1.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도입

1) 사회문화적 인식

-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나 개인의 성격문제라는 인식이 팽배한 범죄이다. 따라서 신고율도 극히 저조하고, 신고를 해도 사법기관의 처분 역시 미약하다.
- 가정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이며, 성폭력, 아동학대, 학교 폭력 등 다른 폭력과는 깊은 관계를 보이는 사회범죄이므로, 다른 범죄와 같은 기준으로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현재 부부폭력률은 53.8%,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인 것으로 나타났다²²⁾.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로 사법체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전체 발생률에 비해 극히 저조하다.
- 신고된 범죄의 경우도 대부분 검찰단계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전반적으로 ‘가해자 처벌’은 매우 느슨하다. 한편 임시조치의 경우, 실제 이를 어겨도 처벌하지 않아 임시조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불안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 출동한 경찰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가해자를 격리하거나 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포함)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포’와는 다르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현장에서 체포될 때 재범율이 현저히 감소한다. 사법적 개입이 재범억제에 가장 효과적이다.
- 한편, 위 조사에서 대한민국 기혼남녀 85.3%는 정부의 가정폭력방지정책의 실효성에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으며, 응답자가 제시한 필요한 정책 1 순위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이다.

3) 정책과제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 체포 우선제도’ 도입

22) 2010년,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 가정폭력범죄 신고율 제고 및 사법처리 실태 개선

1) 사회문화적 인식

- 가정폭력 발생시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거나 자녀 생각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보다는 집안일로 인식하고 감추려는 경향이 여전하다.
- 그러나 가정폭력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 재범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범죄로, 신고율을 높이는 한편, 엄격한 사법처리를 요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가정폭력은 신고율이 발생율에 비해 현저히 낮다. 2010년 가정폭력으로 접수된 사건은 매년 1만 2~3천 건 정도에 불과해 신고율이 극도로 낮으며, 기소율 역시 10% 미만에 불과하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배우자의 폭력이 심각하지 않아서’ 29.1%,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26.1%, ‘배우자를 차마 신고할 수 없어서’ 14.1%, ‘자녀 생각에’ 10.9%와 같은 사회통념상의 이유도 많았지만,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도 9.3%에 달해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
- 이는 경찰 신고 후 경찰 조치내용을 보면 명확해지는데, ‘출동은 했으나 집안일이니 서로 잘 해결하라며 돌아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5%, ‘집안일이니 둘이서 잘 해결하라며 출동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7.7%로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 경험이 68.2%에 달하고 있다. 또한, 경찰 신고 후 가해자의 폭력 행동이 변화되지 않거나 이전보다 증가된 경우도 61.3%로 매우 높다.
- 더욱 심각한 것은 사법기관의 공식적 통계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대법원의 사법연감으로는 가정폭력이 얼마나 접수되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입건된 후 가정보호사건과 형사사건으로 분리되어 송치되고,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현재의 사법통계로는 가정폭력범죄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한, 현재 통계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이 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의 범죄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가정폭력 범죄의 발생 정도, 처분결과, 가해자의 특성,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밝혀내기 어렵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서는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며, 그 중 통계는 매우 기초적인 자료이다.

- 2011년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사회 복지사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의료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낮고 당사국 내 발생 가정폭력 건수와 일치하지 않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통계자료와 조치결과를 정기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3) 정책과제

- 가정폭력 피해자 및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 조치 마련
- 가정폭력 사건의 사법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 마련

3.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15년을 맞은 지금도 여전히 6가구 중의 1가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의식, 낮은 성평등 의식에서도 기인하지만,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가해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가급적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해자의 개선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시행결과, 가정폭력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도 미흡하다.

2) 정책과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전면 재검토, 특례법상 경찰의 임시조치권 강화, 수사과정에서의 가정폭력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비

6-4. 성매매

1.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1) 사회문화적 인식

- 성매매를 성도덕과 풍속으로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성매매여성에 대한 도덕적 편견과 사회적 낙인이 여전하고 여성개인의 책임과 자발성만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성매매는 근절 불가능한데 성매매를 금지하니 음성화되어 신변종업소가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 온갖 방법으로 여성들을 성매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강력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²³⁾ 성매매 4,605만 건, 성매매 종사자 14만 2천여명, 전국 45곳의 성매매집결지 여성의 수 4,900여명, 성매매와 관련된 거래액수 6조 6,26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다른 조사²⁴⁾에서는 성매매 알선업체를 통한 액수가 5조 4,030억원(81.6%)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알선업체 가운데서도 일반유흥주점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액수가 3조 5,729억원(53.9%)으로 전체 성매매 거래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한편 사우나,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향락·유흥업소와 룸싸롱(71.5%)의 탈루율은 70~90%를 넘고 있다²⁵⁾.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명 ‘바지사장’이나 실장, 마담을 내세우기 때문에 알선범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매매를 성매매행위 혹은 유사성교행위(유사성행위 포함)의

23) 전국 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알선업소, 변종 성매매 업소, 인터넷 및 해외 성매매 거래의 추정 액수(2010 성매매실태조사 보고서, 서울대 여성연구소)

24) 출처 : 한겨레21/2011.11.28 제887호. 노래방(8459억원·12.8%)이나 안마시술소 등 마사지업소(4477억원·6.8%)의 매출 비중도 높았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주고받은 성매매 대가는 5765억원(8.7%)이었다. 그 밖에 변종 성매매(2547억원·2.6%), 해외 성매매(2195억원·3.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1718억원·2.6%) 등도 거대한 지하경제를 구성하는 군소 시장이었다.

25) 2009. 10. 20,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고, 그 입증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수사 및 단속과정도 문제이다. 성매매 알선업주 등 실제 성매매를 알선한 자들은 ‘모른다’ 등의 책임회피와 증거 인멸, 사채업주 혹은 불법 보도방 업주들 또한 가벼운 처벌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

- 〈사례〉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부지역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발생한 여성들의 연쇄자살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채를 쓰다가 사채빚에 시달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연대 맞보증되어 있던 여성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 3월에 자살한 여성의 유서를 통해 업소 내에서 성매매강요 및 업주의 횡포와 폭력적 상황이 알려지면서 성산업 착취구조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들은 성산업의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개인적인 사채문제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면서 성산업 구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극적이다.
-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처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한 불법영업장(소위 키스방, 테마방 및 휴게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성매매피해자가 늘어나고 변종 성매매업소와 새로운 형태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정책과제

- 성매매에 대한 개념규정을 ‘성적 착취행위’로 확대
- 성매매 알선업주에 대한 불법수익의 몰수, 추징 등 강력한 처벌 시행
-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단속, 적발, 업소폐쇄 및 건물주에 대한 처벌 등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규제 강화
- 범망 피해가기식 성매매 알선행위(자유업종, 온라인/인터넷 성매매알선 등)에 대해 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및 이를 위한 법안 마련
- 성산업 확산을 막아내기 위한 다각적인 수요 차단정책 모색

2. 형사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인정과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1) 사회문화적 인식

- 유흥업소 등 합법적 성산업 내 성매매 알선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고 성매매여성의 개인적 선택에 의한 행위라는 시각이 팽배하여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
- 그러나 성매매여성들은 경제적 소득보장, 선불금 제공 등의 미끼로 성산업구조로 유입된 이후, 성매매 착취 고리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국제사회에서도 성매매여성을 사회구조적인 피해자로 인식하여 자발과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여성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알선자, 사채업자 등 중간착취자들은 범망을 피해가며 여성들을 다방, 주점, 안마시술소, 보도방 등에 억류하거나 빗으로 훑아매는 등 성매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불금 형식이 아닌 개인채무방식(이자제한법 위반 고리사채와 강요된 일수)으로 여성들을 연대보증 등의 채권채무관계로 묶어 성매매알선 행위를 간접화하며, 여성들을 직접 혹은 자발로 성매매한 자로 범죄화하게 만드는 형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 그러나 성매매수사는 경찰조직 내에 고정된 수사 시스템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경찰내부의 전담기관이 자주 바뀔므로 인해 일선경찰들도 수사와 조사에 혼선을 빚고 있으며, 피해자의 인권을 중심으로 한 수사가 아닌 실적위주의 수사로 인해 성매매피해 여성들이 처벌되고 있다.
-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경찰·검찰은 진정이나 고소를 한 여성들, 심지어 상담소에서 법률지원을 하며 의견서와 진술서, 고소장 등을 통해 선불금을 빌미로 성매매강요가 이루어지는 정황증거를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강요의 내용이 분명치 않다며 여성들을 처벌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수사접수를 힘들게 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건마저 오히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는 등 여성들을 오히려 범죄화하고 있다.
- 법과 관련 당국은 결과적으로 사채업주와 업소 업주는 범망을 빠져 나가게 하고 있고, 피해자이면서 내부고발자인 여성에 대한 법적보호는 하지 않음으로써

성매매 문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다.

3) 정책과제

-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여성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형사소송을 의뢰한 여성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전체 수사과정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내부지침 마련
- 성매매관련 수사와 단속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담기구와 전담인력 배치

3. 성매수, 접대/상납 행위 공무원 및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1) 사회문화적 인식

- 공무원 사회, 기업 집단, 정치권력, 법 집행기관까지 성매매를 접대나 대가성으로 상납하면서 부정부패와 연결시켜온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남성들은 이를 중대한 범죄로 인지하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를 주면서, 성구매자와 알선업자를 고발하는 여성을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공직자의 ‘성매매’ 관련 부정부패행위는 조직범죄와 상관관계가 높고 시민안전과 경제구조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구조를 거대화시키고 여성들에 대한 착취구조를 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명 ‘검찰과 스폰서’ 사건은 고위검찰 간부를 비롯하여 많은 검사들이 지속적으로 스폰서로부터 접대와 향응에 이어 성상납까지 받아 사회문제가 되었다.
- 포항 유흥업소 여성 9명의 연이은 자살로 밝혀진 업주들과 일선 담당경찰들의 유착행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 역시 2006년 12명, 2007년 13명, 2008년 1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현직 경찰이 성매매업소를 영업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 2009년 3월에는 청와대 행정관 2명이 방송업체 관계자로부터 룸살롱에서 향응을 제공받고 2차로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었음이 보도된 바 있고, 2011년 8월에는 지식경제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들로부터 수차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고 나아가 일부 성접대까지 받은 사건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술자리 이후 성매매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 건수는 2004년 101명에서 2008년 229명으로 2배 이상 급증, 교육공무원들의 경우는 2007년 31명에서 2008년 42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2년 2월에는 제주에서 성매수를 한 공무원이 대거 적발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다른 지역에서 연수차 왔던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 이처럼 공공기관과 사회권력층의 성매매범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접대, 성상납 관행은 심각한 권력형 부정부패 행위로 이어지기 때

문에 강력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행정관 사건 때에는 강력한 징계없이 사표를 받는 것으로 무마하고 후속조치로 직원들에 대한 금주령이 유일했고, 경기도 공직자의 경우 성매수는 감봉 1월, 성매매는 정직 1월 등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과 경고 수준의 징계만으로 그쳤다(2011년 9월 국회 자료). 또한 2011년 12월에는 현직 군수가 미성년자 성매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 현행 감사규정에는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위반 행위 중 성범죄 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은 있으나,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고 가벼운 처분에 그쳐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

3) 정책과제

- 공직윤리 규범 및 감사규정에 성매수 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분기준 마련, 일관성 있는 사정체계를 위한 제도 수립, 이를 전담하는 정책기구 설치
-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시스템에 성매수와 향응 접대 전력 등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
- 공무원들의 성매매예방교육 등 인권·윤리교육 채널을 다양화하고 상시감사 모니터링 실시

4.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1) 사회문화적 인식

- 성산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들은 돈을 벌기위해 업소에서 일을 한다는 인식이 강해 여성들이 처한 불법적이고 취약한 상황에 대해 외면하고 있다. 또한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정상으로 취급되는 한국문화 속에서 상품거래하듯 하는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중개행위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 성산업 이주여성, 해외성매매 문제,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은 성노동의 문제나 개인의 생존권 문제가 아니다. 전지구적 성착취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여 해결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10년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성과 소년들에 대한 상업적 성착취로 연결되는 인신매매의 시발점인 동시에 경유지 및 최종목적지가 되고 있다”며 한국의 인신매매현실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 유입국으로서의 한국
 - 외국인여성이 한국의 성산업에 유입되는 경로는 주로 E-6 비자(연예홍행비자)를 통해서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의 추천이나 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하지만, 실제로는 유흥접객원 역할을 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성매매에 나아가기도 한다.
 - E-6-2(예술홍행사증)를 통해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은 1988년 180여명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 1,017명, 2009년에는 4,577명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E-6비자를 통해 입국한 여성의 90% 이상이 유흥업소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 E-6-2 비자 형태 외에도 초과체류 이주여성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신매매 브로커의 알선에 의해 성매매로 유입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 송출국(해외인신매매)으로서의 한국
 -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를 중심으로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부산지방경찰청의 해외인신매매사건 조사에서도 호주, 일본 등으로 인신매매되어지는 여성이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주로 해외브로커와 사채업자들의 꾀에 빠져 어쩔 수없이 해외로 가게 된 것이다.
 - 여성들은 돈도 벌지 못하고, 여권을 빼앗겨 한국에도 오지 못하는 불법체류자

로 전락하게 된다. 한국에 오더라도 이전의 빚 때문에 체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빚쟁이로 전락하여 다시 업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 기획사의 임금착취와 임금체불 : 기획사와 클럽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지만 여러 이유를 들어 임금의 2/3정도를 기획사가 갈취한다. 노동부에 진정을 해도 형사적 처벌은 없고, 민사합의를 종용하기 때문에 계약대로 임금을 못받는다.
- 성매매 강요 : 업주나 마마상들은 매상을 올리기 위하여 주스쿼터제와 성매매를 강요하며 이를 견디지 못한 여성들은 탈출한다.
- 강제출국 및 업주의 횡포 : 여성들이 입국하자마자 기획사에서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에도 여권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며, 업소를 탈출해 나올 경우 근무지 이탈로 인해 국내체류자격이 박탈되어 강제출국 당한다.
- 법적 소송 중의 문제 : 1~2년 이상 진행되는 장기간의 소송기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탈출 이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므로 벌금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여 소송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성매매 피해자에게 발급되는 기타비자(G-1)로는 취업이 불가능하여 생계해결이 안되므로 대부분 포기한다.
- 2011년 7월 CEDAW는 한국정부에 대해 ‘외국인 여성을 선발하는 연예기획사의 현행 초기심사절차를 강화하고, E-6 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여성들이 성매매 착취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업소들에 대한 효과적인 현장 감시 장치를 수립할 것’과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고,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인신매매를 범죄로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3) 정책과제

- 포괄적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법 제정, 관련 형법 조항 개정
- 성구매자 및 외국인 성산업 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
- E-6 비자 및 외국인 전용유흥음식점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 절차 강화, E-6 비자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위한 제도 강구
- 인신매매피해자의 체류자격보장
- 임금체불 업주에 대한 형사적 처벌 강화
- 외국인 피해여성지원을 위한 상담소-쉼터-자활지원센터 등 통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해외로 여성들을 송출하는 알선브로커와 업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 및 피해여성들에 대한 보호지원방안 확보.

5. 10대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책 마련과 통합지원 확대

1) 사회문화적 인식

- 청소년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은 폭넓게 형성되어 있지만,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 또한 한편에 존재한다.
-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성착취로 엄중처벌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성매매 단속 저조
 -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4 ~ 2008년까지 5년 동안 검거한 청소년 성매매 사건 5,165건 가운데 약 81%에 해당하는 4,230건이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건전 만남 유도신고센터 신고접수현황에 따르면 2007년 접수된 신고건수는 12,264건으로 2006년도 2,648건의 4.6배 증가하였다.
 - 인터넷 사용이 전국민화되면서 인터넷 유해사이트, 채팅, 전화방 등 인터넷에서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성매매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8년 디지털문화 이용실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는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1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한 성매매 검거건수는 2008년 647건, 2009년 590건, 2010년 414건, 2011년 6월 현재 196건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성매수 신고프로그램 유스키퍼(영국의 그루밍법과 같이 성매매유인행위를 신고하여 처벌하도록 하는 것)와 같은 유인행위를 신고하도록 한 방식은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경찰수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절차의 복잡함과 유인행위에 대한 교육부족, 실명확인 등으로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 청소년 성매매예방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방통위 등 관련기관과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관련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더 논의하고 대책을 모색하여 청소년 성매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약화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매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수자가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

에서 성구매를 한 경우로 한정하여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성매수자는 처벌이 약한 성매매처벌법으로 의율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속율 또한 2004년 26.6%였지만 2010년 4.1%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 이는 청소년이 인터넷채팅 및 조건만남 등을 통해 성매매를 할 경우 자발적이고 상습적으로 파악하여 성착취 피해자로 보지 않으면서 성매수자 및 알선자의 양형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 그러나 201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업자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만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 1항 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2012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청소년 성매매 초범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를 보호하고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해 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처벌의 한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법상의 불처벌 원칙을 지켜야 한다.

3) 정책과제

-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국가가 적극대응하고 인터넷 및 전자매체에 대한 규제강화와 사이트 폐쇄 및 포탈에 대한 징계조치 강화
-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고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구매자, 성매매 알선자들에게 실형 선고
- 성착취피해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지원 및 자활대책 마련,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
-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의 보호사건처리 규정 삭제
- 강력한 수요차단 정책 수립

성주류화

1. 성주류화 추진체계 및 젠더거버넌스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성주류화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사회시스템 영역에서 추진되는 정책의 설계, 집행, 모니터 및 평가 등의 제반과정을 ‘젠더(gender)’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성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으로, 실질적 성평등을 이루는 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시작하여, 2006년 성인지예산제 도입, 2007년 성별분리통계 작성, 2012년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 현재 성주류화 관련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그 실효성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3년째 매우 형식적인 수준으로 제출되고 있어 실제 예산 편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역시 실질적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의 분석 근거자료가 되는 성별분리통계 역시 두 제도를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성주류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성주류화 정책 전담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데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성주류화 정책 관련 각 부처의 조정자적 역할을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타 부처에 비해 권한이 약한 현실에서 그 조정력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모든 부처에 걸쳐 성주류화 정책을 추동하고 강력히 견인해낼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정책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또한 성주류화 추진체계에는 민간NGO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성주류화 정책이 민간 NGO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건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책입안자 또는 공무원 주도만으로 추진된다면 성주류화 정책도구들은 형

식적이고 기술적 평등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또한 궁극적 목적인 실질적 성 평등 실현보다는 형식적 결과물에 매몰되어 관료주의의 폐해에 빠질 우려가 있다.

2) 정책과제

- 정부, 전문가, NGO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 설치
- 여성가족부에 대한 성주류화 정책 통합적 추진 주무부처로서 위상 정립
- 성주류화의 실효성을 위해 NGO와의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

2.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시민참여형으로 전환

1) 현황 및 문제점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하고 업무로 자리를 잡는 성과를 만들었다. 2011년에는 292개 기관이 참여하여 2,960개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2011년 9월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부터는 법, 국가 중장기 계획 등에까지 성별영향평가 영역이 확대될 예정이다.

〈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

('10.9.30 기준, 단위 : 개소, 개)

구 분	'08년		'09년		'10.9.30.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기관수	과제수
계	295	1,531	298	1,908	293	2,436
중앙	31	78	34	72	31	75
지자체	248	1,437	248	1,820	247	2,345
시·도 교육청	16	16	16	16	15	16

- 그러나 성별영향평가는 실질적으로 각 부처의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시키고 결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정도로 내실화되지 못했다. 거점 성별영향평가 센터나 여성정책연구기관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지역 편차가 크며, 지역의 특성이 배제된 획일적인 중앙 지침과 추진일정, 성별분리통계의 미흡함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의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원인 분석 및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책이 필요하다.
- 특히 그동안 성별영향평가가 정부 및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어 성별영향 분석 결과와 환류개선 과정에 정책 수혜자인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역동성과 추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성과 NGO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2) 정책과제

- 16개 광역시도에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성주류화 거점센터 설치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 성별통계를 체계적으로 연계, 성평등 정책으로의 환류시스템 구축
- 시민참여형 방식으로 성별영향평가 전환
- 성별영향평가 통합DB 구축 및 정보 공개 의무화
- 성별영향평가 과제 확대 및 추진부서 권한 강화

3. 성인지예산 실효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2010 회계연도부터 정부의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은 정부가 단순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데 국한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성주류화 정책 수단으로 전혀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부가서류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서 마저도 내용적으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수혜자의 성별구분 이외에 성별에 따른 수혜의 차이가 나타난 원인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 성평등 목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유는 전 부처를 총괄하고 추진력을 담보하는 상시 전담 추진체계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현재 성인지 예산은 기획재정부 내 사회예산심의관실 문화예산과에서, 결산은 기획국고국 회계결산과에서 병행하고 있고 별도의 추진 부서가 없다. 이는 성과관리예산제도 도입과 함께 기재부 재정정책국에 성과관리과(전담인력 6명)를 설치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정부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부처에 성인지 담당관을 지정하여 그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거의 각 부처와 기관에서 성인지 예산기획관, 예산담당관 등을 대부분 겸직으로 두어 형식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내 성인지예산제도는 추진체계가 불명확하고, 그 위상도 매우 낮아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2) 정책과제

- 성인지예산제도 추진체계 구축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내 ‘성인지예산 편성심의위원회’ 설치
 -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 공간 마련 및 거버넌스 강화
 - 기획재정부 총괄 조직 내 성인지예산 상시 전담 추진체계 설치
 - 성인지예·결산 작성 및 점검을 체계적이고 상설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성인지 예·결산센터 설치²⁶⁾

26) 조세연구원의 성과관리센터가 모델이 될 수 있음. 현재 조세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성과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상설 교육도 운영하고 있음.

○ 성인지예산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등 개정

- 성인지예산서 정부 예산요구서 제출²⁷⁾ 시기에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
- 국회 예산 및 결산 심사시 성 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심사 및 검토보고서 의무화

27)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에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성주류화 정책 교육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4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우선적으로 받아야 할 대상자에 대한 조사결과 기관장 및 단체장(43.6%), 3급 이상 고위공직자(19.0%), 4,5급 공직자(28.3%) 순으로 나타나 5급 이상 관리직에 필요하다는 응답이 90.9%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제도와 같이 기관 내에서 협조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관장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및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따라서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교육을 공무원 교육체계 내에 필수과목으로 안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 및 성별영향평가의 연계성과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성주류화 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2) 정책과제

-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교육체계 내 필수과목으로 성주류화 정책 교육 실시
- 5급 이상 고위공무원 및 기관장 대상 성주류화 정책 특별교육 실시
- 국회 및 지방의회 의원과 보좌관 대상 성주류화 정책 교육 확대

5. 성별분리통계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성별통계는 2002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2007년에 통계청이 통계법을 개정하면서 성별통계의 근거규정을 포함시켜 성별 통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성인지통계는 통계를 이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다름을 보여줌으로써, 성불평등과 관련된 사회 현상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도구이다. 특히 성인지통계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들 사업을 뒷받침하는 성별 통계의 정책적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별분리통계는 성주류화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 예를 들어 산업 등 일부 통계는 성별 분리 집계를 하지 않아 성별효과를 볼 수 없으며, 노동 분야의 지역별 성별통계가 중앙으로 모이지 않아 지역 여성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성별분리통계는 지역과 중앙, 계층과 분야에 관계없이 모두 구축되어야 하며 현재 매우 부족한 수준인 성별통계를 체계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다른 성주류화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

2) 정책과제

- 통계청 사회통계국 내 성별통계과 신설
- 국가승인 통계만이 아니라, 성인지예산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성별분리통계를 지정, 구축, 관리되도록 성별통계 운영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여성 대표성

8-1. 정치분야 대표성

1.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체 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는 득표와 의석간의 불비례성이 크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전체 의석수의 18% 수준(299석 중 54석)으로 현저히 낮아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전체 의석의 50%로 확대하여 현행 선거제도가 갖는 대표성 왜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과제

-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체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 (공직선거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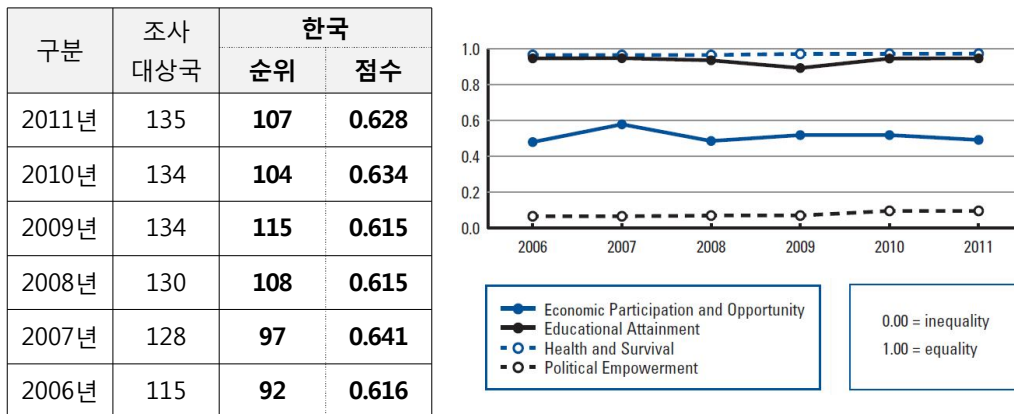
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여전히 낮은 여성의 정치대표성

- 세계의원연맹(IPU)에 따르면 한국은 2011년 11월말 기준 국회 내 여성의원비율 14.7%로 조사대상 188개국 중 81위²⁸⁾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나 국제사회 내 위치에 비하면 초라한 순위로, 같은 기간 세계평균 19.8%, 아시아지역 평균 18.3%²⁹⁾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최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 격차 지수(GGI, Gender Gap Index)³⁰⁾에서도 한국은 조사대상 135개국 중 107위에 불과하며, 특히 그 중 정치적 성 평등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6-2011 한국 성 격차 지수(GGI) 추이



○ 여성 정치할당제 실효성 제고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50%를 여성에게 할당하고 홀수순번에 여성을 배치하는 남녀교호순번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하야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시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위반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실

28) <http://www.ipu.org/wmn-e/classif.htm>

29) <http://www.ipu.org/wmn-e/world.htm>

30) <http://reports.weforum.org/global-gender-gap-2011/>

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할당 50% 위반 시 이에 대한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 지역구 선출직의 경우 ‘30% 여성 추천 노력’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은 극히 소극적이며, 강행규정이 아닌 경우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비례대표를 통해 진출할 수밖에 없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권고 조항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에게 추천하도록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 16개 광역 시도 단체장 중 여성 0%, 기초자치단체장은 228명 중 6명으로 2.6%에 불과하다.

2) 정책과제

-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위반 수리불허 및 등록무효 (공직선거법 개정)
- 선출직 여성후보 추천 30% 권고규정 의무조항으로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특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 (국회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확대

3.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1)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각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신설(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되어 정당 여성정치발전비가 제도화 되어있어,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한 보조금의 2배 상당한 금액을 감액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 여성당직자 인건비로 집행되던 문제는 여성단체의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제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일정부분 해소되었고, 선거출마자 지원이 불가하던 부분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라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용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경상보조금 지출 기준의 틀에 막혀서 갖는 제약도 여전하다.
- 현행 여성정치발전비는 경상보조금에 한해 10%로 정하고 있으나, 지역구 여성공천 확대와 여성후보자의 지역구 출마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거보조금에 대해서도 10% 여성정치발전비를 배분하고 이를 지역구 여성출마자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제도는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인 ‘정당별 국회의석수’ 및 ‘국회의원 선거당시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추천보조금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우선과제로 하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과 달리, 각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을 견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배분방식을 그 원래의 입법취지에 맞게 여성후보자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 비율과 추천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여야 한다.
- 정당법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며,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이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17조와 제18조 요건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풀뿌리 차원에서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고 정치진출의 첫 통로가 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 지역 정치결사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진출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여성정치발전비를 차세대 예비여성정치후보자 발굴 및 교육훈련 지원, 여성후보자 출마 지원, 여성정치세력화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사용
- 여성정치발전비 집행에 관한 독립적 의사결정구조 신설 : 정당 정책연구소와 같이 독립적인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관련규정 마련, 여성정치발전비의 집행용도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여성정치발전비로 할당
- 지역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정당 설립요건 완화

4.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국회법 등 개정

1)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8월, 성희롱·성적비하발언으로 여성인권침해행위를 한 국회의원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 내 자정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인권침해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징계처리 절차 및 수위에 관한 국회법 등 개정, 정치인들의 낮은 여성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 의무화 등 법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과제

- 국회의원 여성인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
 - 국회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실시
 - 국회의원 징계 의결요건에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 추가
 - 윤리특위 심사 기한 규정
 - 징계에 관한 회의 공개 원칙
 - 제명된 의원에 대한 보궐선거 및 차기 국회의원총선거 입후보 제한
- 국회 자정력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여성 비율 30% 의무화
 -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처리 기한 규정

8-2. 공공분야 대표성

1. 공공기관 · 공기업 등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발해지고 있으나,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야 할 공공부문의 여성 참여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중앙행정기관 소속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은 2010년 18.5%에 불과하며, 38개 중앙부처 중 28개 부처 산하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30%에 못 미치고 있다. 또한 위촉직 여성 비율은 도리어 2006년 29.6%에서 2010년 22.3%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지침’완화, ‘정부업무 특정평가’지표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제외하는 등 정부가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마련했던 규정 등을 철회한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 위원회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는 변함없이 추진·강화되어야 한다.
- 공무원 사회에서 여성의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2010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40개 기관의 고위공무원 1,321명 중 여성은 모두 41명으로 3.1%에 불과하며, 이는 2006년 3.0%에서 5년 동안 겨우 0.1% 증가한 것으로 수년째 3%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 내외에서 답보상태이다. 특히 2010년도 공기업의 여성임원은 1.9%로 2007~2009년까지 3~4%대에서 현격히 하락했다. 이에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확대를 위한 지침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정부위원회 전체위원 중 여성 비율 40%로 확대 · 강화(‘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개정)
 - 정부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현황 공표 및 개선 권고조항 신설(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정부업무 평가지표에 여성위원 가점 반영

- 고위공무원단 및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 제고
 - 고위공무원단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임원 임용 시 성별 균형적 임용 조항 추가
 -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여성위원 30% 비율 의무화

8-3. 사법분야 대표성

1. 대법관 · 헌법재판관 여성 비율 40% 달성

1) 현황 및 문제점

-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서 최종적인 법해석과 법적용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그 사회의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최고 사법기관의 법관 구성은 우리 사회의 사법 정의 구현을 위해 균형있게 인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14%), 헌법재판관 8명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해 여전히 사법부의 성비는 불균형이다.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최고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고, 사법영역의 여성 대표성이 여전히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비율을 의무화 하는 등 사법영역에서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여성 비율 40% 달성
- 후보추천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 50% 의무화

성평등 교육 · 미디어

9-1. 성평등 교육

1. 초·중·고교에 인권교육 의무화

1) 현황 및 문제점

- 성별, 학별,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다문화·다인종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일반인 92%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은 5.3%에 불과했다.
- 초·중·고 등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은 특강 형태로 편성 운영될 뿐, 인권 일반에 대한 교육은 부족하다. 대학의 경우 법대를 중심으로 인권과목 영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나, 인권 일반에 대한 과목 개설은 충분치 않다.
- 공공분야의 경우 법무 분야, 경찰 분야 등 법집행 분야의 인권교육은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지만,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각 분야에서의 인권교육 기반 구축은 미흡하다. 군대와 사회복지 분야에 인권교육이 도입되고 있으나, 검사나 일반 행정 분야의 경우 거의 전무하다.
- 유엔에서도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있다. 유럽은 시민교육·정치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고 일본, 페루에는 관련 법이 존재한다.

2) 정책과제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 인권교육의 정체성, 인권교육의 권리와 의무 규정, 인권교육 추진기구 설립, 인권교육 실행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지원시스템 등 구축

2. 성차별적 교과서 내용 수정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인권위원회³¹⁾ 조사에 따르면, 2010년 개정 교과서에 여전히 성차별적이고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밥을 챙겨주는 엄마, 쇼핑하는 엄마, 과일 깎는 엄마 등 가사와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일로, 소비영역을 담당하는 역할로 묘사되고 있다. 반면 퇴근하는 모습의 삽화는 항상 남성으로 대표되며,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리더는 모두 남성이다. 이는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 영역’, ‘리더역할’을 상징하게 되어, 어린이들에게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 그 외에도 위인들의 언행과 사진들은 남성 위인들만 제시하여 남성 중심적·우월적 사고를 반영한 사례,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주인공은 주로 남성

31)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2011. 8 상임위 결정문

이고 정직한 행동의 주인공은 대부분 여성으로 묘사하여 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사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을 그려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 인종 및 이주노동자, 장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사례 등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 정책과제

- 성별 고정관념을 반영하거나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초·중·고 교과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를 제작해야 한다.

3. 여학생과 남학생의 동등한 교육적 성취 지원³²⁾

1) 현황 및 문제점

- 교과에 대한 태도, 진로 및 계열선택 등에서 학생의 성별은 학생들의 활동양식이나 의식을 지배하고 규율하는 강력한 기제이다. 예를 들어, 여학생은 국어와 영어, 남학생은 수학과 과학에서 우수한 성취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³³⁾. 또, 여학생의 진로 선택은 남학생에 비해 지나치게 인문사회과정으로 편중되어 있다. 특히 여학교에서는 68.5%의 여학생들이 인문사회과정을 선택한 반면, 남녀공학에서는 71.6%가 선택하여 수학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선호도가 여학교 학생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남녀공학에서 오히려 수학을 남성적 교과로 인식하는 여학생들의 성 고정관념을 더 강화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수행평가가 중등교육 현장에서 남학생 열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비롯하여 수업태도에서 훈육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녀학생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학생들이 학습활동 전반에 걸쳐 보여주는 성별 차이는 단순히 점수상의 유·불리의 문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차이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대안을 세워야 한다.
- ‘여자가 왜 이렇게 더럽니, 남자답게 과묵해라,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남자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등 학생의 1/4이 교사로부터 성역할 고정관념적 발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23.2%), 특히 여고생들은 30%가 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성차를 고정관념화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남녀학생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한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위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개별학교 특성을 반영한 실행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업에서의 차이점과 대응지침(호주 사례)〉

- 여학생 : 과목선택에 있어 여학생들은 학교를 마친 후의 장래 진로를

32) <2009, 남녀공학 중등학교에서의 성별 교육실태와 향후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췌

33) 위 연구, 2003년에서 2007년의 5개년에 걸쳐 5개 교과를 대상으로 중 3과 고 1의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임.

생각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 전통적으로 여학생들이 잘 하지 않는 과목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하 생략)

○ 남학생

- 남학생들은 도움이 필요해도 말을 하지 않고 알고 있는 척한다. 과제를 줄 때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세부적 내용으로 하고… (이하 생략)

-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대부분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교사가 이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방법과 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현장 연구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학교교육이 성평등한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성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며, 교수활동에 대한 반성적 사고, 학생들이 보여주는 성 정체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적 교수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양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

4. 학교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및 성희롱 금지 학교규칙 제정³⁴⁾

1) 현황 및 문제점

- 학교생활 중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비율은 남녀 중학생의 경우 22.4%, 고등학생의 경우 19.8%로 5명 중 1명꼴로 성희롱을 경험했다. 중고교 여학생의 경우 16.8%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반면, 남학생의 답변은 25.4%였다. 이는 남성간의 성희롱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인데, 이성에 의한 성희롱 피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비해, 동성에 의한 성희롱은 남학생들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 동성간 성희롱의 경우 자칫 장난이나 놀이, 혹은 호기심으로 인한 일시적 행동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으나, 성희롱 피해학생은 정서적 불안정을 경험하거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행사에 참여를 꺼리게 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성희롱 피해를 당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3배~5배 정도 더 많은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되므로 자아존중감 상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고 학생들 간에 폭력행위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도 학교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2) 정책과제

-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규칙에 성희롱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성희롱이 심각한 인권침해행위임을 학생들이 인식하도록 한다.
- 성희롱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구제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34) 위 연구.

9-2. 정보/미디어

1. 인터넷 불쾌광고 제한

1) 현황 및 문제점

- 인터넷 뉴스 기사의 상하좌우에 여성 비하 또는 선정적 광고물이 도배되고 있고, 포털 사이트의 뉴스캐스트를 통해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p>여자를 녹초만든 정력제 후기보기!</p>	 <p>명품가방 전품목 75%세일!!</p>
 <p>★명기들만 안다! 오르가즘 프로그램~</p>	 <p>2주만에쳐녀시... 여비팔~ 주여즈</p>
 <p>화제의K양 남친몰래 C컵 가슴원 사연</p>  <p>성인남성 80% 사이즈에 고민중</p>	 <p>40대 아내도 “이런기분 처음이야”</p>  <p>48kg, 집에서 혼자 똥뻐살 빼는법?</p>  <p>똥뻐살 -38kg 감량 잠만자고 빠졌어요</p>  <p>놀라운 혜택의진화! NEW 씨티클리어카드</p>

- 아직 이성적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작위로 광고가 노출됨에

따라 왜곡된 성의식이 조성되고, 성범죄로부터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거나, 마초성향의 남성적 사고로 인해 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 2007년 발족한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자율규제를 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비회원사의 참여를 강제할 수도 없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다. 아울러 실효성 있고 대표성 있는 심의를 위한 구조(광고주 협회의 주도성, 학자 중심, 실제 이용자인 네티즌과 시민단체 참여 저조 등)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 하지만 인터넷의 선정성 광고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노출되어 부작용은 있지만, 이를 과다하게 규제하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편,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숙고해보아야 한다.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2) 정책과제

- 광고주와 이용자들의 자정노력과 함께, 정부·광고주·언론사의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 네티즌과 시민사회가 폭넓게 참여하는 인터넷광고 자율심의기구의 활동을 지원한다.

2. 여성연예인 인권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2009년 3월, 신인여배우 <장자연>이 '저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남기고 자살했다. 이 문건에는 소속사로부터 검사, 기자, 방송사 권력층 등에 술 접대와 성상납을 강요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20명의 사회유력층 인사 중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소속사 대표와 전 매니저로 징역 1년과 사회봉사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그나마도 술과 성접대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폭행과 폭언(소속사 대표) 및 명예훼손(전 매니저)이었다.
-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연예인은 선호하는 직업군이 되어 해마다 지망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예인이 되는 관문도 좁고 직업의 안정성도 낮아 권력층에 대한 술시중이나 성상납을 관행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다. 특히, 여성연예인은 기획사, 에이전시, 제작사, 언론 등 대부분 남성들이 주도하는 연예산업구조 속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만남을 거부할 경우 캐스팅에서 제외되거나 일을 주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 여성연예인(배우)과 연예인 지망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0.2%의 여성연기자가 방송관계자나 사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제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으며, 63.6%가 폭언 및 인격모독과 같은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신체의 일부(가슴, 엉덩이, 다리 등)를 만지는 행위를 경험한 사람은 31.5%,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받은 경험은 21.5%, 성폭력 강간 등 범죄 피해를 경험한 사람도 6.5%였다. 여성 연기기자의 55%는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유력 인사와의 만남을 제의받았다.
- 연예기획사와의 전속계약은 해당 연예인을 소속사에 예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계약에는 지나친 장기계약, 불공정한 수익분배, 과도한 사생활침해의 내용을 담고 있다. 회사와 연예인의 수익배분구조는 신인의 경우 8대 2, 9대 1로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인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 아무런 규제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계약으로 인한 피해발생은 연예지망생 때가 대다수이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고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하는 관행 때문에 표준계약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 청소년 연예인 및 지방생 103명에 대한 조사(여성가족부, 2010년)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다리,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경험이 10.2%있고, 특히 여성청소년은 60%가 강요에 의해 노출을 했다. 56.1%가 다이어트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었고 14.6%가 성형수술을 권유 받았다. 또한 18세 미만 청소년 연예인 중 35.9%가 하루 8시간 이상, 10.3%가 주 40시간 이상 노동했으며 41%가 야간근로(밤10시~오전6시) 및 휴일근로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국내법 및 아동에 대한 국제협약이 금지하고 있는 연소자에 대한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것이다. 또한 초·중·고 재학중인 청소년은 47.6%가 일주일에 만나질 이상 수업에 빠진 경험이 있어, 학습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했다.

2) 정책과제

- 성접대를 제공받은 사람의 경우 직접 돈을 내거나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성접대 수수자와 성접대를 알선하는 기획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집행을 강화하고 관련 법을 수정해야 한다.
- 과도한 계약기간 등 기획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연예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을 현실화하고, 계약 및 연예활동 기간 동안 여성연예인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 청소년연예인의 경우 과도한 노동시간, 몸에 대한 권리 침해(다이어트 및 성형 권유), 에이전시에 의한 과다수수료 및 뇌물 요구 등에 노출되어 있어, 법적 보호와 기획사 등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또한, 중, 고등학교 교육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 연예매니지먼트 종사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통일 · 평화

1. 화해협력과 공존을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 추진

1) 사회문화적 인식

- 남성은 60.7%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답한 반면, 여성은 46.4%만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별에 따른 통일의식 격차는 13~14% 포인트로 수년간 이러한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³⁵⁾.
- 평화 통일 외교 분야는 교육, 복지, 주거, 의료와 같은 주제에 비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적고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본다.
- 남북 관계 악화,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사건, 강경한 대북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북한을 경계와 적대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의 분쟁 관리, 해결, 예방에서 무능력을 확인하면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비판적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지난 정부들의 대북화해협력정책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남북 교류협력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로 평가절하 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6.15선언, 10.4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 한반도 비핵화와 교류협력을 병행하던 정책을 폐기하고 북핵 폐기 조건으로 경제지원을 추구하는 ‘비핵개방3000’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에 진전은 없으면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남북 민간 교류에 부정적으로 대응하고, 5.24 조치 이후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관계가 후퇴했다.
- 남북관계 악화 속에서 남북협력기금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남북협

35) 김병로, 2011년 통일의식 및 북한인식의 변화, 2011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과 통일준비, 서울 대통일평화연구원 학술심포지엄, 28쪽

력기금 지출액은 2008년 2312억원, 2009년 1000억원, 2010년 862억5000만원, 2011년은 426억 8300만원이다.

〈연도별 남북협력사업 승인현황 (단위 : 건)〉

구 분		'91~'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12	계
경제	미가경협	1	2	6	0	2	5	1	2	6	10	4	6	9	1	19		74
	개성공단	-	-	-	-	-	-	-	-	17	26	15	163	53	10	6	1	291
	산교	-	-	-	-	-	-	-	-	-	-	-	-	-	12	11	18	41
사회문화		2	1	5	5	4	6	7	13	16	47	26	19	3	-	1	1	156
계		3	3	11	5	6	11	8	15	39	83	45	188	65	23	37	20	562

* 통일부, 2011.12

3) 정책방향

- 북한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공존하고 상생해야 하는 동반자이다.
-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바꾸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촉진하여 남북 공존과 상생의 기반 위에 사실상의 통일, 남북연합을 추진한다.

4) 정책과제

- 선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하여 해결한다는 병행전략 추구
-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 남북당국의 합의문 이행
-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의회 회담, 실무 회담 등 당국간 회담 정례화, 남북 협력 확대하여 '사실상의 통일' 실현
- 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확대,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포함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 적극 시행
- 이산가족 상봉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의 즉각 재개, 종교· 예술·체육·청년·학술·여성 등 남북 민간교류 허용

2.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1) 사회문화적 인식

- 북한의 핵실험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는 한편,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 내부 변화로 한반도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북핵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도, 북한과 협력 관계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인식도 커지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이후 핵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2) 현황 및 문제점

-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 및 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이 중단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의 핵 능력은 강화되었다. 북한은 2차 핵실험(2009), 우라늄 농축프로그램 공개(2010) 등 핵능력을 더욱 강화했다. 남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 남북 사이에 ‘우발적 충돌방지’를 비롯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무너지고 북방한계선(NLL)에서 긴급 군사통신선(hot line)도 두절되는 등 최악의 남북관계를 맞았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던 장관급 회담을 비롯한 정치적 대화가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되고, 2002년 연평해전 이후 2007년까지 없었던 서해교전이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발생했다.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11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한국 영토(연평도)에서 첫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 남한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북한 급변사태를 준비하는 작전계획 작성 및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확대했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확대로 중국의 한반도 주변 군사훈련 강화 등 한반도 주변이 강대국의 군사적 대립의 장이 되었다.
- 방위력 개선, 병력운영, 전력유지를 포함한 국방분야 예산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예산액은 29조5627원, 2011년 31조4031억원, 2012년 33조1552억원이다. 특히 방위력 개선에 10조1350억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그 중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 투자를 앞세워 첨단무기를 구입할 예정이다. 군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3) 정책방향

- 북한과 미국의 갈등이 북핵문제의 주요원인이므로, 북미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한다.
- 남북 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위기를 관리하고 분쟁을 예방·해결해야 한다.
-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인간안보를 적극적으로 구현해나간다.

4) 정책과제

-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 등 국제사회의 합의 이행,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지원
-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평화협정 체결
- 서해상 군사적 충돌 방지 위한 핫라인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재가동
- NLL지역을 공동어로수역 &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조성
- 남북화해와 협력, 상호군축, 군사비 감축

3. 한미동맹 편향 외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로 확대

1) 사회문화적 인식

-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속에서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협력이 사안에 따라 나타나고 있으므로, 강대국 대결 속에서 한반도적 관점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한미동맹 편향외교가 나타나고 있다. 한미동맹을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할 것”으로 천명하고 정치, 군사, 경제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아프칸 재파병, PSI 참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확대를 포함해 한미 양국군의 협력이 강화되고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과 동두천에서 있었던 10대 여학생 성추행 사건 등에서 나타난 한국의 형사관할권 침해, 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 동북아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립이 강화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중관계와 미중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이 사건의 원인과 사후처리를 놓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한국, 미국, 일본이 대립하였다. 다른 한편 연평도 사건이후 중국과 미국은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고 이를 막기 위해 부분적으로 협력한다.

3) 정책과제

-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에서 주변 4국과의 외교 강화
- 동북아다자안보협력 추진 :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예방, 역내 국가간 신뢰구축, 동북아의 경제적 잠재력 극대화, 지속적 경제발전 위해
- 주한미군 주둔 경비에 대한 한국의 분담금 재검토
- 여성 및 아동인권 조항 신설, 형사관할권 강화, 환경 조항 강화 등 SOFA 개정

4.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여성참여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 여성의 기여 확대’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이와 더불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여성부와 통일부의 여성 지원 사업이 줄었다.
- 2011년 6월 국회에서 32명의 국회의원이 <여성평화안보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촉구안>을 발의하였다. 1325호는 평화안보분야에서 성인지적 관점 통합, 여성의 참여 보장, 성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를 촉구한 평화·안보·여성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이다.
-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의 성인지 예산이 타 부처에 비해 지극히 적은 규모이다. 외교통상부 성인지 예산은 총 8개 사업, 426억원 규모에 대해 작성되었는데, 외통부 총 세출예산안의 2.3% 수준에 해당된다. 통일부는 총 2개 사업, 128억원 규모로 2.3% 수준에 해당하며, 국방부는 총 3개 사업, 45억 7000만원 규모로 0.02% 수준에 불과하다.
-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지극히 낮다. 장·차관급 여성이 한 명도 없으며 2009년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국방부 11.7%, 통일부 14%이고, 2011년 6월 현재 외교통상부 18.3%이다. 고위공무원단은 통일부 4.8%, 외교통상부 1.2%와 국방부는 0%에 불과하다.
- 민간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교류를 막고 있으며, 정부와 여성NGO들과의 파트너십이 파괴되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전에도 이뤄졌던 여성들간의 교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2009년 이후 남북여성대표자회의와 일본군성노예문제 해결을 위해 열리기로 한 남북여성들의 모임도 정부가 불허했다.

2) 정책방향

- 평화가 위협받게 되면 민간인,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주체가 될 때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린다.
- 평화안보분야 정부정책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반영한다.
- 남북간 적대적 대결의식을 약화시키고,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간 상호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남북여성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 남북협력기금, 해외개발원조에 여성들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정책과제

-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 여성의 역할 확대 명문화
- 여성가족부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활동 총괄
- 평화·통일·여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성별 통계 작성 및 보고
- 남북협력기금 집행
 - 기금의 15%를 북한여성을 지원하는 항목으로 규정
 - 남북여성교류, 남북여성협력사업, 대북인도지원사업 지원
 - 여성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현황 확대 및 보고
 - 구호와 회복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과 여아가 받는 혜택 정리 및 보고
- 평화·통일·외교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 증진
 -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고위직 여성의 비율 확대시킬 제도적 장치 마련
 - 2020년까지 통일·외교통상·국방부에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30%, 관련 위원회 여성비율 50% 확대, 특히 여성이 소외되어온 국방부에서 여성참여 비율 확대
 -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에 성평등의 원칙에서 여성의 참여와 지원을 보장하는 법 조항 포함
- 평화협상에서의 여성 참여
 - 남북협상과 6자회담에서 공식적인 대표와 참관자로서 여성의 참여 증진
 - 민간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남북여성교류 지원
- 유엔안보리결의문 1325호 이행
 - 1325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작성
 - 평화협상, 안보와 통일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 구조 추진
 - 남북 사이에 화해, 협력, 평화 형성을 위해 정부와 여성단체 사이에 정보교류, 의제 개발, 평화통일 및 개발협력 과정에서의 상호협력
- 성평등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 현지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한국군의 젠더교육 확대
 - 파병 이후에도 정례적 교육, 성폭력과 관련한 범죄가 발생했는지 여부 보고
- 군사비 축소, 복지향상 및 남녀 격차를 해소하는데 자원 재분배
- 통일교육과 평화교육 확대하고 성인지적 관점 채택, 여성교육대상자와 여성강사의 숫자 확대, 여성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평화교육 지원

이주 여성

〈정책 방향〉

- 현재 한국사회 거주하는 이주민이 140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이주는 글로벌화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로 인해 국가별 경제 불평등 상황이 심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주민은 ‘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가족을 동반해 살 수 없으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대상이 아니라 긴급 구제를 받을 수 없다.
- 특히 아시아에서의 ‘이주의 여성화’ 현상으로 이주여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이주여성은 이주노동자 혹은 결혼이주민, 유학생 등의 신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들도 전반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언어장벽, 인종 차별적인 시선과 태도로 인한 인권 침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 이주민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국적이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살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기본적 권리의 주체로 이주민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라 본다.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해서 국가는 구호나 생색내기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이주민의 불편함에 귀를 기울여 진정으로 소통하려고 하고, 사회적 통합으로 이루어 가야한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차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권, 노동권, 평등권을 보장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1. 결혼이주민의 체류권 보장

1) 사회문화적 인식

-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결혼이주민은 한국 가족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결혼이주민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겪어야 하는 불편함과 차별의 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알려져 있지 않고, 사회적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 그러나 이주여성긴급지원을 위한 상담전화 중 두 번째로 많은 내용이 체류문제(14%)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의 불안함을 심화시키고, 배우자 신원보증제도 등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를 야기하는 체류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다.
- 이주여성 인권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배우자 신원보증 제도가 평등한 부부 관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는 가정폭력 등의 위기 상황에서 이주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임을 지적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신원보증서는 피용자와 사용자의 관계를 규정한 신원보증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국제결혼가정에 적용하면 국가는 사용자, 한국인 배우자는 중간 관리자, 결혼이주여성은 피용자가 되는 것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처럼, 한국인 배우자 신원보증제도는 그 자체로 결혼제도와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로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인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체류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혼이주여성은 소위 ‘불법 체류자’인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게 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제도이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04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전체 혼인건수 중에서 10% 이상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 2011년 12월, 국제결혼에 의한 결혼이민자는 총 144,681명이며, 이 중 여성이 86.4%이다.
- 출입국관리법에는 외국인도 타인에 대한 신원보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입국 현장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들은 자신의 체류 문제가 한국인 배우자의 ‘마음먹기’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현실이다. 특히 한국인 배우자가 신원 보증을 철회할 수 있게 한 것은 한국인 배우자의 주도권을 보장한 것으로 부부 관계에서의 불평등을 제도가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다.

-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의 경우 대부분 법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면 이를 근거로 외국인 배우자는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혼인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여, 결혼으로 인한 체류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혼인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재정적 능력이나 언어 습득,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귀화절차를 밟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결혼 비자 소지자의 체류의 연장을 위해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 한국은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 외국인 등록증 취득, 체류연장, 영주, 귀화 등 입국 및 체류의 전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배우자는 한국인 배우자에게 의존적이고 불평등한 부부 관계로 인해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 UN 사회권위원회는 2009. 11.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아직도 거주자격(F-2)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에 의존하는 것을 우려하고, 한국정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여성들이 거주자격을 얻거나 귀화하기 위하여 한국인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3) 정책과제

- 혼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체류자격 자동 연장
-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연장, 영주권 및 귀화 과정에서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 폐지, 결혼이주민이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체류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우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조치 마련

2.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1) 사회문화적 인식

- 다문화가정 혹은 국제결혼 가정으로 명명되면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남달리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정책이 주로 ‘가족’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의 인권 침해문제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 가족이나 사회 곳곳에서 이주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태도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이나 외부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외국인’이라는 차별의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여성의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경험이 12.6%로 조사되었다. 불안정한 국제결혼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인 배우자나 그 가족들이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빼앗거나 모국 지인과의 교류금지, 외출 금지 등으로 통제하기도 한다. 2010년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 가정에서 47.3%가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에 따라서는 ‘죽거나 죽이거나’ 등의 극단적인 가정폭력의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 이주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성희롱 실태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2002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조사에 의하면 12.1%가 사업장 내 성폭력 경험에 있다고 응답했다. 2010년 경남지역 이주민 실태조사에서는 여성 취업자 중 9.3%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2004년 창원여성의 전화가 외국인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서는 127명 중에서 41.7%가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성폭력을 당한 장소는 직장이 62.5%, 회식자리 15.6%로 근무 장소나 근무와 연관된 장소가 전체의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도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가 41.5%로 가장 많았고, 대응방법으로는 62%가 혼자 참는 것으로 대답했다.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6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고, 폭력 피해 이주여성쉼터도 전국 18개소, 자립공동체 및 자립지원센터 3개소 등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주여성의 특

성을 모른 채 한국인의 경험 틀에서 이주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대부분 신체적 폭력 피해나 객관적인 피해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로 쉼터 입소를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쉼터가 필요한 많은 이주여성들은 정작 입소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 이주여성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 대해서 한국 법의 내용과 구체적 대응방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폭력 피해상황에 대해 충분하게 상담하거나 대응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이주여성 전문상담소가 없는 상황이다. 이주여성의 경우 언어의 제한과 법 지원체계의 차이 때문에 한국인 상담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체류와 이혼을 위한 법적 지원을 위해서도 별도의 지원 절차와 남편의 상담이 필수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상담소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 2011년 49차 CEDAW 권고안에 의하면, “가정 폭력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포함하여 외국인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와 배상 방안을 인지하도록”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3) 정책과제

-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인권보호
 -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정신적·언어적 학대, 협박 등 비물리적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인권보호 조치 강화
 -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 체류자격 인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
- 이주여성노동자 인권 보장
 - 사업장과 기숙사에서 여성 이주노동자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사업장과 기숙사에 대해 관리 감독 실시
 - 사업장 내 정기적으로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 여성 이주노동자는 남성 이주노동자와 분리된 안전한 기숙 공간 보장
- 이주여성 폭력 피해 지원
 -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치유, 손해 배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제공, 직업훈련 제공, 취업 연계 등의 사후 지원 서비스 등 포괄적인 지원시스템 보장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그들의 권리 및 배상방안을 인지하도록 인식 캠페인 실시

3.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감독, 처벌권·배상권 확대를 통한 국제결혼 피해 구제 강구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국내외 결혼중개업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율하여 합법화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 베트남,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등 한국인과 국제결혼 비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현행법상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법적 불일치가 불법 브로커를 양산하고, 국제결혼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베트남 현지에서 확인한 한국인 불법 결혼중개 건수는 2008년 4건, 2009년 5건, 2010년 7건이었다.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에서는 아예 불법 결혼 중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이에 반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 피해사례는 2005년 64건, 2006년 96건, 2007년 72건, 2008년 137건, 2009년 17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국제결혼중개업체는 해마다 난립하고 있고,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2010년 11월 국제결혼중개관리법이 개정되어서 결혼여부 결정에 중요한 신상정보를 양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아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고, 2011년 12월에는 인권침해적인 국제결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자 소개 금지, 단체맞선 및 맞선을 위한 집단기숙을 금지, 결혼관련 서류의 보존 의무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시 자본금 1억원 보유, 그 외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행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 폐업을 제한하는 등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강화되었다.
- 하지만 2010년부터 중개업에 대한 관리 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었다. 지방정부는 그 동안 농어촌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조례를 정하여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을 지원해왔고, 이 사업이 국제결혼중개업의 협력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 한국 정부가 한국의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규제한다 할지라고 국제결혼 상대국은 많은 경우 상업적 중개 결혼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중개인의 불법행위는 개입할 수조차 없으며, 결국 현지 사무소 관리 규정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불법적 행태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정책 과제

-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의 효과적 이행 보장, 중개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 개발
-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 정확한 신상정보제공은 물론 당사자가 결혼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보완, 국제결혼 중개과정에 발생하는 불법적 행동에 대한 처벌 및 배상 규정 강화
- 현지 중개업자들의 불법적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국제공조 강화, 중개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함
- 결혼중개업체 관리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 관리 지침 개발

4. 미등록 또는 중도입국 이주아동에 대한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³⁶⁾

1) 현황 및 문제점

- 국제결혼 자녀는 국적법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고,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 그러나 외국인끼리 결합한 가족은 현행법의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 이주노동자 부부의 경우, 부모 중 상당수가 미등록 신분이고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과 부모에 대한 미등록자 단속이라는 이중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권 보장이 어렵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학교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대부분 학교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 특히 한국 국적이 없는 미등록 체류 이주여성이 출산할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로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미등록 상태가 된다. 미등록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 권리, 의료, 교육, 사회보장 등 ‘UN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 어머니가 한국남성과 재혼함으로써 어머니를 따라 중도에 입국하는 아동·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은 새로운 한국 가정에서의 적응에서부터 어머니와 양아버지의 결혼관계의 지속여부에 따라 입양/파양, 한국 국적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불안한 조건에 있다. 또한 예민한 사춘기 시기에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입국, 초기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도 입국에 따른 한국 중·고교 입학, 전학에 대한 제도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 또한 존재한다.

2) 정책과제

- 제도적으로 무국적자가 되는 미등록 영아와 아동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이주아동은 부모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출생증명서 발급 및 발달권 보장
- 이주아동의 인권,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이주아동은 단속 및 구금조치에서 제외
- 중도입국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36)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1 「이주인권가이드라인」

여성 장애인

1.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1) 사회문화적 인식

-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은 가부장적인 문화와 사회체제로 인해 여성과 장애, 빈곤이라는 다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 정책 설계에 있어 성차별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아 제대로 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여성’ 장애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받고 있는 ‘장애’로 인한 차별과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이 이중 억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회문화적 인식이 확대되어야 하며,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한 여성장애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수준, 취업률,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인 여성장애인은 67.3%에 달해 남성장애인 37.0%에 비해 저학력 비율이 약 2배가 높고, 취업비율은 25.48%로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 52.4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은 전체 여성장애인의 3분의 1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용경험이 낮고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그동안 관련 정책의 수혜범위에서 특히 소외되어 왔다. 즉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기회가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 추진체계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06년 12월 통과된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여성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인식함과 동시에 기존의 장애인 정책 및 장애인 관련 법령 등을 성인지적으로 평가하고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여성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 따라서 일상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빈번하고 강도가 다르며 다른 형태의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지원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여성장애인 정책 전담 추진체계 및 부처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3) 정책요구안

- 여성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성인지적·장애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립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지원
 - 지역, 소득,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모성권 보장 및 장애유형을 고려한 모성보호
 - 산전산후 건강관리 및 출산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도우미 지원
- 양육 및 가사지원
 - 자녀양육 및 보육지원, 자녀학습 도우미 지원
 - 가사도우미 지원
- 여성장애인 고용제도
 - 장애인의무고용을 내 여성장애인 고용할당 50% 준수
 - 여성장애인 공동작업장 설치 및 창업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개발
- 평생교육
 - 교육기회 확대, 취업과 진로에 필요한 전문교육 및 평생교육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각종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자립지원과 가족 지원
- 전문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연구
- 행정부처 내 여성장애인 지원 추진전담체계 설치

2. 여성장애인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양육체계 구축

1) 사회문화적 인식

- 여성장애인은 스스로의 재생산권 능력에 대해 의심받음으로써 여전히 가족에 의해 재생산권이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 여전히 성적 주체로서 자기결정권과 재생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성능력에 대해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져 양육권 침해나 제한된 양육지원체계만 제공되는 현실에 놓여있다.
- 여성장애인은 산전후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특수한 조건임에도 그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정보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은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이다. 그럼에도 여성장애인이 임신, 출산, 육아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경제적, 현실적 어려움과 차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중 유산 경험은 48.7%로 높았고, 주위의 권유로 인공임신 중절하는 경우가 22.9%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재생산 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현재 정부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관련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여성장애인의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의 경우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여성장애인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 여성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출산비용 지원’(14.8%),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13.6%), ‘자녀교육도우미’(8.7%), ‘산후조리서비스’(8.5%),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8.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관련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정책요구안

- 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프로그램 마련
 - 장애여아, 장애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 여성장애인 성적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당사자 대상 교육
 -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 재생산권 관련 정보 접근성 확보

- 재생산권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장애유형별 출산, 육아 등 준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및 양육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경제적 보전

- 종합병원 산전 검진 비용, 산후조리원 추가발생 비용, 양육지원금 등 지원

○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관리 및 상담지원체계 구축

- 청각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정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수화통역사 활용
- 출산이후 적절한 산후조리가 될 수 있도록 홈헬퍼 서비스 양적 질적 확대
- 산후조리원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 장애 특성을 고려한 산전 교육 지원 및 여성장애인 임신, 출산에 대한 두려움 대처 및 극복을 위한 다양한 상담지원체계 구축

○ 장애유형별 다양한 자녀 양육지원 제도 마련

- 장애유형 특성별 육아프로그램 지원
- 자녀와의 관계 및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 청각장애 부모를 위한 건청 자녀 언어발달을 위한 보육시설
- 지적장애 부모의 자녀의 원만한 지능발달을 위한 학습보조교사 파견
- 지체장애 부모의 자녀를 위한 지속적인 야외활동과 문화체험 활동지원
- 장애아동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도우미 사업의 현실화
- 장애엄마나 아동이 아플 때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 취업장애 엄마의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

○ 장애가 있는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 및 정보 접근성 확보

- 학부모의 장애에 따라 적절한 방식의 자녀 학교생활 관련 정보제공 의무화
- 장애가 있는 학부모의 학교 및 담임교사와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
-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학부모가 학교에서 매일 제공되는 알림장 등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이들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자녀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데 학부모의 장애가 제한으로 작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모자보건법 낙태의 범위 재규정 :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조항 중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는 장애가 유전될 수 있다는 편견을 갖게 하며, 장애태아의 낙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이므로 삭제

3. 여성장애인 지표개발 및 성별통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사회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각 분야별 연구조사 활동은 아직 미약하다. 특히 여성장애인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가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남녀장애인과 남녀비장애인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성별통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파악하고 분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책의 수립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평가할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또한 대학, 연구소, NGO 단체 등의 연구기관의 여성장애인 정책 개발 및 연구가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성학이나 사회복지학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 논문에도 여성장애인 활동가나 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적극 결합하여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주제별로 연구·조사활동을 진행하지만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2) 정책과제

- 장애 관련 모든 통계의 성별분리통계 구축
- 여성장애인 현황 관련 지표 구축 및 성인지예산 작성
- 여성 장애인 양적·질적 실태조사 실시
- 장애 및 성 인지적 관점과 여성장애인 당사자성이 반영된 정책 분석·연구

한부모 · 미혼모 여성

1. 한부모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한부모가족지원정책 추진

1) 사회문화적 인식

- 혈연으로 연결된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바람직한 가족이며,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한부모(미혼모 포함)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을 해체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문제이기에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소득상실과 자녀양육 책임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 사별, 이혼, 미혼 등 구성되는 한부모가족은 가족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경제활동 진입과 자녀양육을 양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빈곤에 처할 위험이 높으므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한부모가족은 전체 가구의 9.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2010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청), 남성한부모 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는 여성가구주 가구이다.
- 2011년, 이혼자에 대한 차별의 심각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7%가 ‘이혼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2004년도 56.4%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응답자 중 여성(61.5%)이 남성(50.8%)보다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미혼모 차별에 대한 심각도는 전체 응답자의 84.5%가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으며, 이 역시 여성(90.2%)이 남성(76.3%)보다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국적제도를 위한 차별없는 사회기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으며(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강지원,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 수급가구, 보훈가구,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전체 한부모 가족의 11.6%로 조사되었다(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최저생계비 기준 100-130% 이하의 한부모가구는 정부로부터 현금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그 수준이 매우 낮아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별 및 이혼 직후 자녀의 양육과 한부모로서의 자립, 정서적 상처 등을 치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 선정 및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선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유지를 위해 아동양육비(12세 미만)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현실화하여 아동양육비 상향조정 및 보충학습비, 현장학습비 등 비정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고용지원정책의 목표는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하는 것이었기에 저임금 직종에 집중 취업하면서 한부모가족의 90% 이상이 일을 하더라도 빈곤층이 되는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3) 정책과제

-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통로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근로가 가능하도록 보육시설 입소순위 상향 및 방과후 보육 강화 및 방과후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확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산정시 한부모가족의 특수성 반영
 - 자활근로 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일반적인 저소득층 가족보다 크므로 가산급여 지급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자녀양육비를 월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대상을 최저생계비 150%로 확대
- 10대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 마련
- 다양한 형태의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2.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OECD 국가 중 미국과 영국, 캐나다, 스웨덴은 한부모와 생활하고 있는 아동 비율은 20%를 넘었으며, 그중 2% 미만의 아동만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비동거 부모의 양육비 지급을 위해 공식적인 아동 양육시스템(Child support system)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지급 책임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호주,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정부가 보상하는 대지급제도(advance maintenance payments)를 운영함으로써 한부모 가구의 소득감소로 인한 자녀양육 어려움, 빈곤층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 반면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가사소송법을 개정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혼 및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자녀양육비이행소송지원서비스를 제공, 전 배우자 혹은 자녀의 생부로부터 자녀부양비를 받는 방안을 강화하고는 있다. 그러나, 비동거 부모 중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2) 정책과제

- 자녀 양육비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비동거 부모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청년 여성

1. 청년 여성의 안전한 주거권 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청년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 학업 중 발생한 학자금 대출 등의 개인부채로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에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25-29세 전세 가구주 중 74.2%가 보증금 5,000만원 미만의 주택에서 살고 있고, 25-34세 청년층 절반 이상이 영세한 소형의 다가구,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이다.³⁷⁾
- 이러한 현실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시원에 거주하는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비정규직 청년들이며, 서울에만 약 10만 8,000명 정도가 고시원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 중 순수 ‘숙박형’은 6만 2,000명 정도이다.
- 특히 청년여성의 경우 안정적 주거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주거지에서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월세가 저렴한 반지하나 옥탑방, 고시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거형태는 성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 실제로도 젊은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지역에서 연쇄 성폭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1년 미군 병사에 의한 동두천과 마포의 성폭행 사건 모두 고시텔에서 벌어진 일이며, 2012년 3월 춘천의 성폭행 사건은 대학가 원룸에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청년여성의 안전권과 주거권 확보를 위한 특화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37) 통계청, 20-29세 가구주 수도권 전세금 부담 비율, 2005

2) 정책과제

- 청년여성을 위한 안전한 공용 임대주택 <여성 세이프 쉼어 하우스(Safe Share Housing)¹> 보급
- ‘주거연대계약 제도’² 도입
-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보안시스템 마련

1. 여성 세이프 쉼어 하우스(Safe Share Housing)

혼자 사는 주거가 아닌 공동체, 커뮤니티, 안전을 결합한 주택 형태. 공동 부엌, 공동거실 등 공용공간에서는 청년여성들의 커뮤니티가 가능하게 하고, 각자의 독립적 공간에서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모델임. 이러한 공동체 커뮤니티형 소형주택은 20대 여성의 안전한 주거권을 높일 수 있을 것임.

2. 주거연대계약 제도

주택정책의 기본 단위인 ‘세대’를 혼인관계로 한정하여 최근 급속도로 늘고 있는 비혈연 세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문제 해결. 즉 비혈연·비혼인 관계에서도 일정 부분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주택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함. 먼저 공공임대주택에서 도입하고 이후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까지 확대.

2. 청년여성 고용할당 의무제 실시

1)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10월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은 6.7%로, 전체 실업률 2.9%의 2배에 이른다. 더욱이 공식 청년실업자 수(27만6천명)에 취업준비생(55만9천명), 별다른 취업활동 없이 그냥 쉬고 있는 청년층(28만5천명)을 포함하면 사실상 청년실업률은 28%(112만명)에 달한다.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고,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공공기관의 신규청년 채용 비율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대로 매우 저조하다.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 채용비율³⁸⁾〉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채용비율	4.4%	3.8%	2.2%	2.9%	0.8%	2.5% (4.6%)	2.4% (4.7%)

- 대기업 역시 매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오히려 감소했고, 대졸 여성이 남성을 능가³⁹⁾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여성은 여전히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2011년 11월 매일경제신문이 10대 기업을 대상으로 대졸 신입 공채 합격자 남녀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신입 채용 비율은 평균 18.5%에 불과했다. 이는 기업들이 가사, 육아 부담 등에 따른 비용이 많은 드는 데다 장기 고용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년여성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2) 정책과제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화(이중 여성 비율 50% 의무화)
- 민간기업 중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 : 상시근로자의 5% 이상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화(이중 여성 비율 50% 의무화)

38) 괄호 안은 정원 외 채용(1년 이상 기간제 등)을 합산한 청년채용 실적임

39) 2009년 여성 대졸자가 27만1773명으로 남성 대졸자(26만8223명)를 처음으로 능가

3. 청년구직자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구직촉진수당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취업준비상태에 있는 대다수 청년들은 임금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장기화되는 청년실업과 단기 아르바이트에 내몰려고 있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문제는 개인의 능력으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구조적 문제이다. 고용 취약계층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실업과 고용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청년구직자를 위해 구직과 직업훈련을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의 80%를 최장 180일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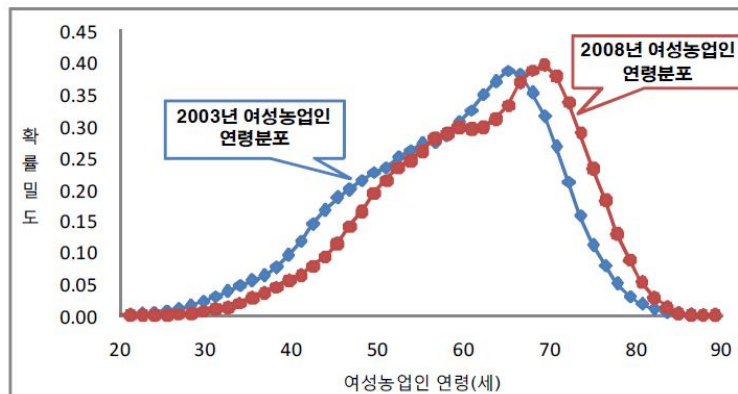
여성 농민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사회문화적 인식〉

○ 농촌 고령인구의 여성화

- 농촌인구는 2014년 총인구 대비 4.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⁴⁰⁾ 이러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고령인구의 여성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의 평균연령은 62세이며, 40세미만 젊은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2.8%로 매우 낮다.

<2003 2008 >41)



○ 여성농민을 여전히 ‘보조적 농업인’으로 인식

- 여성농업인은 전체 농가인구의 51%를 차지하며⁴²⁾,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 주체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여성농업인을 ‘보조적 농업인’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있고, 남성 중심의 문화와 제도적 틀로 인해 여성농업인의 경제 및 사회 활동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여성농업인은 역할에 상응하는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농업의 주체 인력으로 발전하는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⁴³⁾

1.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차원에서 2001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지원조례」가 마련되었으나 이와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부서와 인력이 제대로 없어 실질적인 여성농민에 관한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⁴⁴⁾ 이에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통해 추진 체계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주로서의 지위 확보는 농업정책, 지자체, 마을, 법인 등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의 결정 과정에 참여를 보장하며, 농업인으로서의 지위에 합당한 보편적 복지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200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영주가 남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을 경영주로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26.3%에 불과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경영주는 대체로 고연령, 무배우자(주로 사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는 남성경영주에 의해 대표 되고,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는 남편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고령 여성 농업인 경영주 농가이다.
- 현재 ‘농어업경영체 등록 제도’는 농가 단위로 이루어지다보니 여성농어업인이 경영주로서, 농업의 주체로서의 지위 확보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10년 ‘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과정에서 여성농민의 경영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가경영협약 확대, 배우자를 공동경영인으로 등록한 농가에 대한 연금 특례 등 실질적인 정책대

40) 2011 농림수산식품 통계연보

41) 「200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8 연령분포는 비모수적 커널밀도함수(kernel density function)로 추정되었음.

42) 농림수산식품부, 「200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8

43) 강혜정·마상진, 「여성농업인의 역할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개발연구원, 2007

44)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실로부터 여성농민정책에 대한 업무를 맡아오던 부서가 농촌사회 여성팀으로 축소되었다가 현재는 농어촌복지와 업무를 병행하여 농어촌 사회과에서 맡고 있어 여성농민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임.

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책대안들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 추진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전담 부서와 인력 배치 등 추진 체계에 대한 내용 규정
- 여성농민의 공동경영주 보장 및 지위 확보 방안 마련 : 배우자 공동경영인 등록 농가에 대한 연금 특례 등 농가경영협약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인센티브) 제도 마련

2. 여성농민의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지원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농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고정직불금 형태로 1ha당 70만원을 지급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민의 다수가 밭작물에 집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논농사 종사 비중이 낮은 여성농민들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논이 가지는 다원적 가치만큼 받아차지하는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성농민이 주로 종사하는 밭농업 직불제가 전면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농민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 오늘날 종자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미래 농업의 기반 중 하나인 종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의 여성농민들이 보존하고, 증식시키고자 활동을 벌이고 있는 토종종자와 토종농산물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는 경상남도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2008), 전라남도 토종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2011)가 시행되고 있다.
- 여성농민은 넓은 규모의 농지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에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농민들이 공동의 협력을 위해 조직한 다양한 형태의 자립적 공동체가 농촌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형태의 시설 지원 뿐 아니라 여성농민 협업체 컨설팅, 장기적인 지원 시스템, 소규모 가내 농산물 가공에 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 현재 60세 이상의 여성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으로 고령 여성농민이 농촌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의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바라보기 보다는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인식을 바꿔 고령 여성농민이 전통 지식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함.

2) 정책과제

- 밭작물 직불제 전면 확대

- 모든 밭작물에 대한 직불제 실시 및 ha당 지원 단가 70만원으로 인상
- 토종농산물·종자 보존하는 여성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
- 여성농민이 참여하는 중소규모의 생산·가공 협업체 지원
 - 지역 내 여성농민들이 중소농 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생산조직을 시작으로 공동 생산, 공동 가공, 농기계 공동 사용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생산자 공동체 지원
 - 여성농민이 30%이상 참여하는 중소규모의 협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
- 고령 여성농민 생산 협업 공동체 지원

3. 농촌 지역의 성평등 실현

1) 현황 및 문제점

- 농업구조와 영농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여성농민들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여성농민이 개인적으로 떠맡아야 할 책임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2010 여성농어업인 수요조사」에 따르면 농어촌 사회의 성평등 지수는 가족내 의사결정과 농사일 분담을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 이하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가사노동 공동분담’과 ‘육아 공동분담’에 대한 지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생활노동시간을 기혼 취업여성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이 농한기를 제외하고는 하루 2시간이상, 길게는 3시간30분 정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게다가 농촌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가사·돌봄 노동을 사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 시설과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 농촌사회의 남성주도성과 가부장성은 도시지역에 비해 강하게 남아있다. 여성농어업인들이 느끼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제약요인은 ‘지역사회의 남성주도성’과 ‘여성들의 인식미비’인 것으로 나타났다.⁴⁶⁾ 농어촌 지역의 성평등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에 해오던 성희롱 예방 교육 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성 평등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성평등 교육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농촌 지역에 성평등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여성농민의 가사노동·돌봄 노동의 사회화
 - 마을단위로 공동식당 운영 지원 : 농사일로 바쁜 시기에 마을 단위로 공동식당을 운영하거나 노인 부양을 위한 항시적인 공동 식당을 운영할 시에 마을도우미 파견 및 식재료비 우선 지원

45) 농림수산식품부, 「200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8

46) 「2010 여성농어업인 수요조사」

- 농촌 지역 성 평등 교육 의무화
 - 영농교육,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등 농촌 지역 읍 면단위 각종 회의에 성평등 의무 교육 실시
- 농촌지역 성 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북한이탈여성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지원체계〉⁴⁷⁾

- 규모 : 2010년 9월 현재 새터민 20,000명 수준 (2007년 이후 입국자 중 여성 비율 80% 육박)
- 새터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 80.2%(여성:85%, 남성 72.9%)
- 여성 새터민 중 약 41%만이 경제활동 (남성 새터민 : 70% 가량)
- 여성 새터민 평균 근로소득 : 남성 새터민의 79%수준
- 정착기본금 : 기초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현금 지급(1인 가족 기준 1,900만원)
- 정착장려금 :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 이수 또는 자격증 취득한 경우 등(최대 2,140만원)
- 정착가산금 : 연령, 장애, 질병 여부 등 개인적 요건을 감안하여 지급
- 주거 지원 : 정부, 지방정부에서 건설하는 영구 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우선 알선 및 임대 보증금 제공(1인 세대 경우 최대 1,300만원 한도)
- 취업 지원 : 고용지원센터 취업보호담당관 지정, 취업상담 및 일자리 알선, 직업훈련 기회 제공 및 북한이탈주민 고용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 교부
- 사회복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생계급여 지원,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지정

47) 김석향, 2010,
원하는사람들, 14쪽

1. 북한이탈여성의 인권 보호와 사회문화통합을 위한 적극적 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에 대한 폭력과 경제적 빈곤에 더해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배제와 차별이 더해지는 상황

- 북한이탈여성들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차별 등 여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더해 경제적 빈곤,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부담,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취약함 등 빈곤여성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여기에 더해 ‘탈북자’라는 꼬리표로 인한 배제와 차별도 경험한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포용보다는 오랜 체제대립으로 인한 반감, 분단 후 상이해진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젊은 층의 무관심 등에 의해 좌절을 경험한다.

- <사례> 2008년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1,0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집단 주거하게 되자 단지주민들이 플랜카드를 내걸고 탈북자 추방운동을 벌였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음식나눔행사를 열고 단지주민들을 초대해 오해와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 남한 입국 후에도 가족과 친지의 북한이탈을 돕기 위해 경제적 빈곤 심화

- 북한이탈여성 가운데 30~40대 여성은 북한에 어린 자식을 두고 온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남한에 입국한 직후부터 자식을 비롯한 가족의 북한이탈비용(브로커 비용 등) 마련을 위해 경제적 곤란이 심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친지에게 생계비를 보내야 한다는 압박감은 상당수의 북한이탈여성들로 하여금 과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북한이탈 이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 <사례> 1999년 중국으로 탈북한 뒤 곧이어 나온 남편, 큰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식당에서 일했다. 북한을 오가며 물건을 파는 중국 사람이 북한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0년 4월 작은 아들을 데려오도록 부탁했다. 5월 초 아들을 중국에 데려왔다는 중국 사람의 연락으로 간단히 아들과 전화를 한 후 연락이 끊어졌다. 아들을 데려다 주기로 한 중국 사람이 사례비만 챙기고 작은 아들과 함께 행방을 감추었다. 현재 남한에 와서 살고 있지만, 작은 아들의 소식은 모른다.

○ 북한이탈과정에서 경험한 심각한 트라우마

- 북한이탈여성들 중 다수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과 가까운 사람의 죽음, 실종 등을 경험했다. 또한 중국이나 제3국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매매혼과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인권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험은 많은 육체적·정신적 상흔을 남겨 장기적으로 이들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이러한 트라우마 치료는 거의 부재한 상황이다.
- 〈사례〉 싸우면서 사이가 나빠지면 그 사람들은 가서 신고를 하니까, 남한에 쫓겨야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사는 가족 내에서도 업신여기는 게 있어요. 아이를 낳고 산다 해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저뿐 아니라 다 겪는 그런 고통이에요.

○ 남북 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과 대북비난의 역할을 요구받는 어려움

- 오랜 분단의 역사 속에서 남한과는 상이한 문화와 제도를 내면화한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정착과정에서 이주자 대 동일민족구성원, 특정체제 배반자 대 특정체제 지지자, 사회복지 수혜자 대 동등한 권리자 등 다각도의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
-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남한사회의 정착필수교육이나 이후 활동(탈북자 초청강연 등)에서 일정정도 대북비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북한이탈여성의 자유로운 남한정착과 평화로운 남북사회문화 통합에 역효과를 초래한다.

○ 남북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 정도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수한 입지

- 북한이탈여성의 입지는 남북한의 분단대립이라는 정치적 특수성 때문에 남북한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곤 한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차별이 외화되거나 심화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남한사회와 그 정착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불안함을 초래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다.
- 〈사례〉 원정화 간첩사건이 터진 다음날 회계사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동료들이 자기를 보며 수군거리는 상황을 더는 볼 수가 없었다. 왜 그리냐고 묻자 ‘너도 혹시 간첩이 아니냐’고 묻는데 사장이 회사분위기 때문에 더는 봐줄 수

없다고 나가라고 해서 퇴직당하고 말았다.

2) 정책과제

- 북한이탈여성이 ‘불법월경자’ 또는 ‘불법난민’으로서 겪어야만 하는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적·외교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북한이탈여성들의 생애사적 배경과 가족들의 이탈의 계속성을 이해하는 상담 지원이 필요하고, 탈북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에 대한 적극적 의료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특화된 소액 대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 남북의 평화로운 사회문화통합에 기여하는 방식의 교육과 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 남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성 소수자

〈사회문화적 인식〉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전과자에 대한 차별(82.9%), 장애인 차별(80.5%)과 함께 한국 사회의 매우 심각한 차별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소수자들에 대해 갖는 이유 없는 공포와 혐오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 따돌림, 괴롭힘 등의 ‘혐오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이성애 중심적 사고에 기반해 형성된 성소수자를 ‘비정상’, ‘비윤리적’이라고 여기는 낙인은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제도적 평등과 차별 개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몰이해
 - 최근 미디어에 노출되는 동성애 코드의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성소수자의 존재는 인정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는 가족, 소속집단,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문제,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시민적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가 없거나 무관심하다.
- 보수 기독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주의
 - 보수 기독교계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주의와 집단적 반대행위는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부터 2010년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비난광고, 방송 중지 촉구 집회, 2011년 서울학생인권조례 반대까지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 이와 같은 보수 기독교계는 가정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논리를

확산하고 공격적이고 집단적인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면서 한국 사회의 다수여론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인식을 갖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 뿌리 깊이 남아있는 이성애주의적 사고

- 이성애가 ‘정상’이자 ‘순리’라는 인식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뿌리깊게 박혀있어, 성소수자와 관련된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며 그 어떤 정책적 욕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조차 제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가 시민으로서 어떠한 사회안전망을 필요로 하는지, 계층/지역/세대 등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성소수자가 성소수자로서 필요한 사회적 권리를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규범적 차별 인식

- ‘여성’이라는 성에 요구되는 젠더규범은 여성 성소수자들에게도 더욱 가혹하게 강요되고 있다. 외모나 태도에 있어서 규범적 여성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레즈비언 또는 트랜스젠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폭력은 성차별과 결부되어 가중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젠더와 결부되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1. 성소수자 차별 해소 및 인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부터 제기되어 온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별법’은 10년이 지난 2012년 현재까지도 통과되지 않고 있으며, 2007년 성적지향을 포함한 다양한 차별유형을 금지한 차별금지법 또한 계류되어 있다. 성소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받을 기본적인 법과 제도적 지원들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다.
- 또한 생물학적 남녀 관계 중심의 성폭력 관련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폭력 피해자 및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등 2차 피해가 두려워 인해 법적 보호를 요청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따라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성폭력을 인정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 등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2)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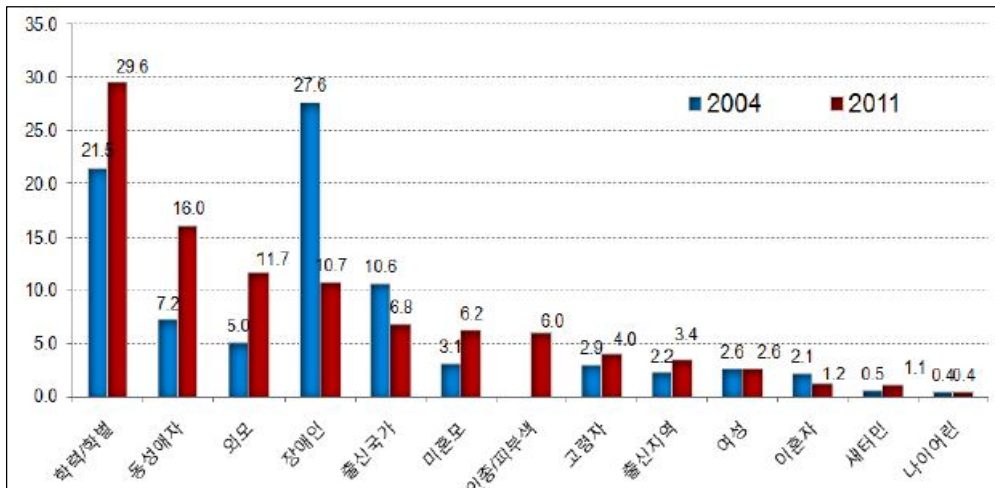
- 차별금지법 제정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반드시 포함)
-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 제정
- 성소수자 차별·피해 및 가족 등 주위 사람들을 위한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상담기관 설치
- 생물학적 남녀 관계 중심인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 :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폭력 피해자 및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 군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마련
-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 침해 법제도 개선
 - 군형법 92조의 동성애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의미인 ‘계간(鷄姦)’이라는 표현 삭제
 -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 ‘변태적 성벽자’ 규정 폐지
 - 동성애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성애자 전환 지원’ 등의 잘못된 관점을 담고 있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폐지

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인식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2011년 ‘국민의 차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은 ‘학력이나 학벌’ 다음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004년 가장 높게 나타났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⁴⁸⁾ 이는 상대적으로 장애 장애인, 성차별 등과 같은 다수의 차별은 그동안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온 반면에, 동성애차별은 사각지대에 있음에 따라 차별의 심각성이 더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 성소수자는 스스로의 정체체성, 성별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 공간에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과 혐오, 폭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이 매우 견고하기 때문이며, 성소수자들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연도별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차별 유형(2004년과 2011년 비교)〉



4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격제고를 위한 차별없는 사회기반 구축, 2011

2) 정책과제

- 미디어 및 문화콘텐츠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성적소수자 인권실태 조사위원회 설치
-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의무화
-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
- 군대 내 지휘관 및 행정 보급관, 사병들 대상 정기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시

3. 가족구성권 보장 및 여성 성소수자의 인권 실태조사 실시

1) 현황 및 문제점

- 한부모, 자녀 없는 부부, 독신모, 독신자, 비혼여성, 동성커플, 공동체 가족 등 실제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족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혈연 중심의 가족형태만을 인정하는 법과 제도는 사회보장, 복지, 주거, 조세 등 각 종 사회정책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배제시키고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성소수자 내에서도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 여성 성소수자는 남성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어 있으며, 더 열악한 현실에 놓여있다. 이들에게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낙인과 함께 ‘여성’이라는 젠더불평등이라는 이중억압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레즈비언들은 여성이라는 점에서 더 낮은 임금, 더 좁은 직업선택, 더 불리한 근무환경에 놓이면서, 또한 동시에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배척, 소외, 무시를 당하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 성소수자의 인권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사회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정책과제

-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돼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조사 및 지원 체계 마련
-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생활동반자등록법(파트너쉽법)’ 제정

IV. 19대 국회 입법과제

▶ 입법과제 목록 ◀

1.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2. ‘성차별금지법’ 제정
3.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
4.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개정
5.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도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6.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
9.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낙태) 허용 - ‘모자보건법’ 개정
10.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
11. ‘가정폭력방지법’ 전면 개정
12. ‘인신매매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13.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
14.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체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 - ‘공직선거법’ 개정
15.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강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
16.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국회법’ 등 개정
17.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
18. ‘여성장애인기본법’ 제정
19.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20. ‘생활동반자 가족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 필요성

- 18대 국회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여성정책기본법(여성가족부 발의)과 성평등기본법(신낙균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바 있다.
- 그동안 여성정책은 많은 성과를 냈지만, 여성특화정책이어서 여성정책이 마치 여성의 권익이나 발전만을 위한 것으로 오인되는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남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면서 남성으로 편중된 정치·경제·사회의 권력 구조와 전통적 성별역할 분업관에 기초한 젠더 관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도 갖게 되었다
- 현재 한국여성들이 처한 다양한 조건과 현실에서 볼 때 여성발전적 정책과 젠더 관계의 변화에 중점을 둔 정책, 성주류화 정책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3가지 접근의 정책이 혼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각의 정책적 특징을 모두 포괄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며 젠더관점을 담은 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
- 여성정책 추진체계에 조정 기능 포함, 심의·조정 대상에 성주류화 조치 포함, 여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주관기관 지정조항 삭제 등 여성인권을 강화하고 성주류화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정

1) 필요성

- 성차별 사건의 특성상, 사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근거법이 필요하지만, 2005년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폐지된 후 법적근거가 사라졌다. 또한, 성차별 사건의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여 사법적 판단과 성차별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구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 별도의 근거법이 필요하다.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 사유로 성별을 명시하고 있을 뿐, 성차별에 대한 정의나 유형, 차별의 예외 등에 관한 조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성차별에 관한 피해구제를 하기에는 제한적이다. 특히 인권위법은 조직법적 성격이 강하여 법원은 인권위법 위반을 근거로 성차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
-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별도의 '성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차별금지법은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를 열거 혹은 예시하는 형태를 가지는 일반 법적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므로, 성차별에 대한 상세한 정의와 규정을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 차별과 연령차별에 대한 별도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매우 주요한 속인적 성격을 갖는 차별금지 사유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제정되었다.

2) 주요내용

- 성차별에 의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성차별에 대한 상세한 정의, 유형, 차별의 예외 등에 대한 조항 및 구제절차에 대해 명시

1) 필요성

- 2007년 법무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재계와 보수 언론, 보수 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발로 인해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등 7개의 차별사유를 삭제하였고, 결국 17대 국회 회기만으로 폐기되었다. 2010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출범, 법안 제정을 다시 검토했으나 큰 진전은 없었다.
-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기 쉬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고용,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금지
- 결과적 차별(간접차별), 괴롭힘 행위, 차별의 표시·조장 광고 행위 금지
- 차별시정기본계획(5년)수립 및 중앙행정기관 등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 악의적 차별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재산상 손해액 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이르는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
- 입증책임 가해자 부담 및 고용차별에 대한 사용자 문서정보 공개 의무화
- 구제절차 진행 과정 중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을시 벌금부과

1) 필요성

- 비공식 영역의 가사사용인은 약 30여 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에서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조는 가사사용인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러한 제외 조항으로 인해 가사노동자들은 일한 임금을 못 받아도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며 일을 하다 다쳐도 산재 적용을 못 받는 가장 열악한 여성노동자들이다.
- 2011년 6월, ILO 총회에서 ‘가사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협약’이 통과됨에 따라 국제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내법 개정이 필요하다.

2)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 : 제11조(적용범위)에서 가사사용인 삭제
- 고용보험법 개정 : 가사사용인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하며, 구직급여 지급조건은 가사사용인의 노동현실을 고려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1개월 동안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지급자격이 있는 것으로 명시
- 산재재해보상법 개정 : 가사사용인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1) 필요성

- 출산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0년 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남성 사용자는 전체 육아 휴직사용자 중 2%에 불과하다.
- 조금씩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남성들이 아이돌봄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육아휴직 사용은 직장 분위기, 경제적 어려움, 인사상 불이익 등을 감당해야 하므로 쉽지 않다.
- 출산·양육기에 하락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에게 편중되어 온 육아 부담을 공동양육자인 남성과 함께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남성의 육아참여는 장시간 노동 관행 및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유리천장 문화를 바꾸는데 중요한 해결방안이 된다.
- 현행 부모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있지만 남성이 기업문화와 낮은 소득 대체율로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기존 육아휴직제도 외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가’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2) 주요내용

- 자녀가 만 1세가 되는 날까지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아버지 영아육아휴가제’ 신설
- 여성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중복 사용 허용
- 국가의 급여 지원 의무 부여 및 고용보험법에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준하는 급여 지원 명시

1) 필요성

-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 월 90만원이 조금 넘는 액수로 노동자 평균임금의 1/3수준이다(2010년 기준, 37.9%).
- 2010년 8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미달인 노동자 196만명 중 여성은 61.5%를 차지(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여성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집중되어 있고, 성별 임금격차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이 될 정도로 여성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 노·사·공익으로 구성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노사 간의 협상이나 공익위원의 중재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면서 노동자의 생활이 보장되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2) 주요내용

-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의 실질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기준을 정함
- 유럽연합(EU)의 경우 최저임금의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60%로 권고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의 평균임금 50% 수준 달성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을 법에 명시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 ILO협약에 따라 노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사 추천권 보장

1) 필요성

- 2010년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중 5.3%에 불과하며,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10.7%만이 이용하고 있다.
- 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여 출산과 동시에 여러 곳에 대기자로 등록하지만, 실제 이용여 이용을 기다리고 있다.
-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이 확대될 경우, 이용아동의 이동을 우려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직적인 반대, 지방정부는 지자체 장의 의지부족 및 설치비용 부담 등으로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 보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지역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있다. 보육의 공공성 확대, 지역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왜곡된 민간중심의 보육현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30%는 되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국공립어린이집의 역할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규정, 지자체의 설치 의무 명시
- 2017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펀드 비율을 조정,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중앙정부의 부담비율 강화 명시
- 지역별 보육수요 조사를 통해 접근성을 고려한 소규모의 어린이집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부터 우선 설치

1) 필요성

- 현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시장, 군수, 구청자에게 신고만 하면 바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의제된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관설립이 용이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며, 수급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도리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하여 임금을 감액하거나, 수급자 혹은 수급자의 가족에게 급여 외의 업무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면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노인복지법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에 대한 법적 명시는 부재하다. 그 결과, 2009년 말 현재 전체 14,560개의 장기요양기관 중 지자체가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1.5%인 227개소에 불과하다.

2)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는 허가제로 전환
- 장기요양기관은 비영리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한정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장기요양 급여제공 금지
- 장기요양급여의 관리범위에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장의 의무 준수 여부를 포함한 평가 결과를 공개
- 국가 및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
-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외 행위를 강요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전가하는 행위, 요양보호사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 마련
- 장기요양위원회의 기능 및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명시하고 요양보호사 대표의 참여를 명문화

1) 필요성

- 적정 피임교육 부재, 출산과 관련한 사회기반의 미비로 낙태율은 세계 1위이다. 2005년 실시된 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5년 한국에서 시행된 임신중절 건수 342,233건 중 모자보건법에 따른 합법적 시술은 4.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불법화로 비밀리에 행해지는 ‘안전하지 못한 낙태’는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향후 출산의 질(quality)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 허용범위가 가장 큰 ‘여성의 요청에 의한 임신중절’도 유럽 국가 중 70%에서 시행되고 있다.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권고(2011. 7. 29)에서도 “낙태를 한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처벌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해 낙태와 관련된 법, 특히 형법을 검토할 것”,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를 위해 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

2) 주요내용

- 임신 12주 이내인 경우 임부의 명시적인 동의 확인 후 인공임신중절 허용
- 임신 24주 이내이면서 임신의 유지나 출산 후의 양육이 임부의 경제력을 현저히 악화시켜 정상적인 임신 유지나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의 상담 및 임부의 명시적인 동의 확인 후 인공임신중절 허용
- 다음 각 호⁵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신 12주를 초과하였더라도 산부인과 전문의 상담을 받은 임부의 명시적인 동의(임부가 명시적인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친족의 동의) 확인 후 인공임신중절 허용

49) 여성연합은 “태아를 떨어뜨린다, 혹은 지운다”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낙태’라는 단어 대신, ‘임신중절’이라는 중립적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50) ① 본인이나 태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②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③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④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태아 기형이 다발성 또는 심각한 기형으로 태아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1) 필요성

-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고 있어, 고소 취소 시 해당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과도하게 합의를 중용 당하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게 된다.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친고죄 조항으로 인한 낮은 기소율과 유죄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 개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 성폭력은 성별 권력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개인의 성적 자유와 자존감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규정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자기결정권’임을 드러내지 못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 현행 형법은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 즉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직접 삽입되는 성교행위로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를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어 남성은 강간죄의 피해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사성교행위는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분류되어 법정형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있는 상황이다.
- 현재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강간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아내강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이를 가중 처벌한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부부강간 범죄화와 친고죄 폐지를 권고했다.
- 현재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유지되고 있어 공소시효가 도과된 수많은 사건의 가해자들의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2) 주요내용

-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전면 폐지
- 형법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 죄”로 개정
-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행위범주에 유사성교행위 포함
- 부부강간죄 및 비동의 간음죄 도입
-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소시효 배제 대상 확대

1) 필요성

-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15년을 맞은 지금도 여전히 6가구 중의 1가구에서는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의식, 낮은 성평등 의식에서도 기인하지만, 건전한 가정의 육성 및 가정의 보호와 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가해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현행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에 대해 가급적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하면서 가해자의 개선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시행결과, 가정폭력범죄자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에도 미흡하다.

2) 주요내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 전면 재검토, 특례법상 경찰의 임시조치권 강화, 수사과정에서의 가정폭력피해자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비

1) 필요성

- 인신매매범죄를 줄이기 위해 UN은 2000년 11월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를 채택한바 있으며,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이하 “범죄방지협약”이라 한다)에 총 150개국이,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 한다)에 총 132개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가 2000년 12월에 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서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법 개정 등 관련 입법조치의 미비를 사유로 서명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 2010년 김춘진의원과 이정희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여전히 법률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당사국이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고, 인신매매와 성매매착취가 팽배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한국정부에게 “E-6 연예인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여성 이주노동자들과, 국제결혼 중개 업체들을 통하여 입국하는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하여,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이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인신매매와 성매매착취의 희생이 된다는 점을 특별히 우려”하며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서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를 비준할 것과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법을 제정하고, 형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 주요내용

-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규정 :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상의 정의를 적용
- 이미 제출된 법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속하게 법률제정과 후속조치 준비

1) 필요성

- 성산업의 확장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자유업종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한 불법영업장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외에 허가취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성매매피해자가 늘어나고 변종 성매매업소와 새로운 형태의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 따라서 영업을 개시할 당시 별도의 법률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소라 하더라도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영업소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2010. 6. 16.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성매매알선업소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수사 및 사법기관은 이미 성매매처벌법상 규정되고 있는 몰수 및 추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그를 위한 별도의 수사지침(필요적 압수수색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주요내용

- 성매매알선 등 업소 행정처분 적용범위 및 준수사항
- 행정처분 및 폐쇄명령 등

1) 필요성

-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이다. 이 제도는 득표와 의석간의 불비례성이 크기 때문에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으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은 전체 의석수의 18% 수준(299석 중 54석)으로 현저히 낮아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를 전체 의석의 50%로 확대하여 현행 선거제도가 갖는 대표성 왜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 여성,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대표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정치적 다원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주요내용

-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체의석의 50% 수준으로 확대

1) 필요성

-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는 제재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구 선출직의 경우 ‘30% 여성 추천 노력’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각 정당의 여성후보 공천은 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정치할당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
- 여성추천보조금제도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으로 분배하고 있어 각 정당의 여성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 맞게 여성후보자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 비율과 정당별 추천 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 여성정치발전비는 포괄적인 용도 규정으로 인해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과 역량강화, 후보자 지원, 정책연구 및 조사 등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치발전비에 대한 독립적인 집행권한을 부여하고, 집행용도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 지역구 여성공천 확대와 여성후보자의 지역구 출마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거보조금에 대해서도 10%를 배분하고 이를 지역구 여성출마자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생활정치·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정치결사체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고 정치진출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주요내용

-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위반 수리불허 및 등록무효 (공직선거법)
- 선출직 여성후보 추천 30% 권고규정 의무조항으로 개정 (공직선거법)
- 여성정치발전비 집행에 관한 독립적 의사결정구조 신설 (정치자금법)
- 선거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여성정치발전비로 할당 (정치자금법)
- 지역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정당 설립요건 완화 (정당법)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 여성비율 30%이상 의무화 (국회법)

1) 필요성

- 2011년 8월, 성희롱·성적비하발언으로 여성인권침해행위를 한 국회의원 강용석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회 내 자정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졌으며, 해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성희롱·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인권침해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징계처리 절차 및 수위에 관한 국회법 등 개정, 정치인들의 낮은 여성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평등 교육 의무화 등 법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주요내용

- 국회의원 여성인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국회법 개정
 - 국회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실시
 - 국회의원 징계 의결요건에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 추가
 - 윤리특위 심사 기한 규정
 - 징계에 관한 회의 공개 원칙
 - 제명된 의원에 대한 보궐선거 및 차기 국회의원총선거 입후보 제한
- 국회 자정력 강화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여성 비율 30% 의무화
 -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처리 기한 규정

1) 필요성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최근 우리 사회는 성별, 학벌, 장애인, 외국인, 비정규직 등 5대 차별 이외에 다양한 차별이 발생하고 다문화·다인종 시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사회통합과 차별 없는 사회 구현
-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미래지향적 사회통합과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 전략으로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여 인권교육10개년계획 수립 등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주요내용

- 인권교육에 관한 최소의 기본적인 사항 규정
- 유엔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원칙을 준수하고 인권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제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의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
- 공공기관과 구금·보호시설의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 의무화
- 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인권교육위원회' 설치
- 인권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인권교육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1) 필요성

-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교육수준, 취업률, 소득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 이하 학력인 여성장애인은 67.3%에 달해 남성장애인 37.0%에 비해 저학력 비율이 약 2배가 높고, 취업비율은 25.48%로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 52.4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가구의 소득수준은 전체 여성장애인의 3분의 1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구성하고 있다.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은 장애인복지서비스 대부분의 분야에서 이용경험이 낮고 교육, 복지, 고용, 각종 폭력 예방 등 그동안 관련 정책의 수혜범위에서 특히 소외되어 왔다. 즉 전 생애주기에 걸쳐 기본적인 권리보장의 기회가 박탈되었을 뿐 아니라 차별과 폭력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 그러나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 추진체계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06년 12월 통과된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은 여성장애인에 관한 내용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여성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 따라서 여성장애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2) 주요내용

- 여성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및 가사지원
- 여성장애인 고용 및 평생교육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전문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연구
- 행정부처 내 여성장애인 지원 추진전담체계 설치

1) 필요성

-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 및 사업 추가 필요(안 제17조, 제18조의1, 제18조의2)
- 의료서비스 지원 신설 :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다른 가족유형보다 높다(신혜령 외, 2006). 이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인식개선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한국의 경우 이혼 및 미혼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인식개선사업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가족가치를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교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은기수, 이윤석; 2005) 한국은 결혼, 동거, 이혼 등에 대한 가치 및 태도가 매우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가치관은 더욱 보수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미혼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김혜영 외, 2009)에 따르면, 미혼모와는 인사정도만 하겠다는 응답은 30~40% 수준이었지만, 친밀한 관계로 지내겠다는 응답은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거리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공공요금 이용료 감면 :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완화를 위해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항공법, 유료도로법 등 개별법에 부분적으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등과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의 사용료·수수료 감면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요내용

-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가족복지서비스 조문 내에 삽입
-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근거규정 신설
- 공공요금 이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 신설

1) 필요성

- 비혼 동거커플, 동성커플, 비혼공동체 등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출현은 전세계적인 경향이며, 유럽에서는 이러한 가족을 보호하는 법안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PACS),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동반자등록법', 독일의 '생활동반자법' 등은 그 대표적인 예로 다양한 생활공동체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헌법 제36조⁵¹⁾는 국민의 가족생활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함이 명시되어 있다. 즉 모든 국민은 가족구성의 권리를 가지며, 가족유형을 불문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 복지, 주거, 조세 등 사회정책의 지원이 혼인·혈연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다른 형태의 가구를 구성한 이들은 법적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 따라서 혼인 및 혈연관계가 아닌 생활동반자 성격으로 구성된 여러 형태의 가족에 대해 동등한 지위를 인정하고, 국가 사회정책의 보호와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2) 주요내용

- 가족구성의 다양화라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률혼 외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서 보장되는 자기결정으로서 '가족 구성의 권리' 보장
- '생활동반자'는 현행 혼인법으로서 인정된 부부관계 외에 사실혼 관계 등 모든 동거관계에 있는 단수의 동반자를 의미
- '생활동반자 가족'을 사회적 가족형태로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사회보장, 복지, 주거, 조세 등 각종 사회정책들에 의해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51)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전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V. 참여단체 및 자문단

1. 참여단체

분야	단체	
(1) 여성노동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2) 일 · 생활 균형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3) 젠더복지 / 돌봄	한국여성단체연합	
(4) 주거 / 의료 / 교육	한국여성단체연합	
(5) 여성건강	한국여성민우회,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6) 여성폭력	가정폭력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매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7) 성주류화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8) 여성대표성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9) 성평등 교육 · 미디어	한국여성단체연합	
(10) 통일 · 평화	평화를만드는여성회	
(11) 이주여성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2) 여성장애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13) 한부모 · 미혼모 여성	한부모여성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14) 청년여성	한국여성단체연합	
(15) 여성농민	한국여성단체연합	
(16) 성 소수자	한국여성단체연합	
(17) 북한이탈여성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18) 입법 과제	해당 단체	

2. 작성자

○ 작성 총괄 및 검수

- 한국여성단체연합 이구경숙 사무처장, 박차옥경 사회권국장, 김현아 부장

○ 작성자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운영위원 공동작성, 정미례 정책팀장
-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 서민순 공동대표, 임원정규 사무국장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김은희 대표
-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 젠더와 건강팀
- 전국여성노동조합 : 황영미 위원장, 안현정 사무처장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정경란 정책위원장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목경화 대표
- 한국성폭력상담소 : 김두나 기획조직국장
- 한국여성노동자회 : 정문자 대표, 임운옥 부대표, 배진경 사무처장
- 한국여성단체연합 : 권미혁 상임대표, 김경희 공동대표, 이구경숙 사무처장, 박차옥경 사회권 국장, 김현아 부장
- 한국여성민우회 : 김인숙 상임대표
- 한국여성의전화 : 송란희 사무처장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신희원 사무처장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염 대표, 강성의 사무처장
- 한부모여성네트워크 : 조지혜, 김현진
- 2012 총선 여성장애인 공약개발연대

3. 자문

-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원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향경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국장
- 변혜정 서강대학교 성평등상담실 교수
- 신동우 주거연합 정책위원장
-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이숙진 젠더사회연구소 소장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정진주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
- 타리 개인활동가
- 한채윤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대표